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인쇄/1997년 12월 8일
발행/1997년 12월 1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통일정책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11-7 5,500원

<정오표>

인쇄과정상에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73쪽 <표 4-6> 북한이 가깝게 지내려는 나라

※ 기존의 표를 아래의 표로 대체함.

<표 4-6> 북한이 가깝게 지내려는 나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한국	-	-	-	7%
② 미국	73%	67%	11%	20%
③ 일본	-	-	-	-
④ 중국	27%	33%	89%	73%
⑤ 러시아	-	-	-	-

2) 76쪽 <표 4-8> 주변국가의 대북한정책

※ <표 4-8>중 러시아 항목에서 ① 현체제 유지정책 응답률 80%는 '-'(0%)의 오식임.

연구보고서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

박 영 호
배 정 호
신 상 진
조 한 범

민족통일연구원

서 문

한반도의 분단은 내재적인 원인도 지적되고 있으나, 냉전과 함께 주변국들간의 세력균형이라는 국제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는 냉전시기 동안 동·서 양진영간 갈등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남한은 미국 및 일본을, 북한은 중국 및 구소련을 지원세력으로 삼아 상호 경쟁하였다. 주변국은 각각 남북한을 자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이러한 구도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탈냉전의 바람이 동북아에도 불어온 것이다. 주변4국간에는 더 이상 이념적 차이를 국가관계의 주요 고려요소로 삼지 않게 되었다. 남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구소련(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기본합의서」의 체결로 남북관계에서도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한편, 동유럽 및 구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위기 위식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수단으로 미국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한 후, 적극적인 대미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의 국제환경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체제유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식량난의 가중은 북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유발시켰다.

최근 주변4국은 상호 교차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를 기조로 한 상호 협력과 견제의 새질서구축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4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동북아의 신질서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북한 연착륙 정책, 일본의 신중한 대북접근, 중국의 북한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 등은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들이다.

사실 주변4국의 협조가 없다면 우리의 통일과정이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통일의 성사여부조차도 불투명하게 될 지 모른다. 그러나 주변4국이 한반도의 통일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가 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주변4국에 대하여 통일된 한국이 결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 또한 그들의 국가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수행된 연구의 결과로서 4인의 참여하에 진행되었다. 연구책임자인 박영호는 연구의 계획, 설문조사 내용, 그리고 제1장, 제2장 1절, 제3장 1절, 제4장 및 제5장을 담당하였다. 배정호는 제2장 2절과 제3장 2절을, 신상진은 제2장 3절과 제3장 3절을, 그리고 조한범은 제2장 4절과 제3장 4절을 각각 담당하였다.

연구책임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주변4국의 전통적인 대한반도 이해관계 및 향후 한반도정세 변화가 자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략적 판단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상대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변4국의 한반도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국 전문가들의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주변국 통일외교정책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

향후 2~3년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 중에서 지난 2~3년전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본 사람이 많았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4개국 전문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통일외교의 역점 대상국, 한국의 친밀국, 그리고 북한의 친밀 대상국에 대한 조사 결과, 주변국 전문가들은 향후 통일외교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주 대상으로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최근 북한의 대중국 유대관계 지속 및 대미국 접근정책 강화는 한국의 정책형성과정에 중요한 고려변수가 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이 한반도통일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많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변4국에 대한 한국의 통일외교정책의 내용이 차별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주변4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자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실질적인 정책이 비교적 조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변국의 공식적 입장과 실제 정책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반면, 자국의 역할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양국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는 이 두 국가에 대한 우리의 통일외교가 매우 세심하게 전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

지난 몇 년간 북한 핵문제의 등장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체제의 붕괴와 같은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는 대체로 변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북한의 개방정도에 대해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 모두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고, 중국의 경우도 거의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개방확대 가능성 및 정도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대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다. 즉 자신이 속해있는 체제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장래를 어떠한 준거틀로 보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장래문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과 관련되는데,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대체로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비는 북한의 장래를 보는 시각과 대체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붕괴단계에서 그럭저럭 생존하거나,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록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쉽게 붕괴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여 발전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는 결국 이들 국가의 대북정책에서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정부가 북한상황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차별적인 대주변국정책을 강구·추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와 북한권력층내 갈등 정도로 살펴본 김정일체제의 정통성에 대해 주변4국 전문가들은 김정일체제가 비교적 안정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김정일체제가 위기상황에서도 심각한 내부저항없이 유지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일본, 러

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권력층내에 강·온파가 존재하고 그들간의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4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대남 공산화정책의 변화 여부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이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미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의 인식과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의 인식이 대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존의 대남 공산화 의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현재의 국력차이로 북한이 공산화 통일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이 남한과의 공존을 희망한다는 견해가 가장 높아, 이들 국가의 전문가들은 미·일의 전문가들보다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상당한 정도로 남북한 공존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적인 전쟁발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원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남북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점을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에서 오판이나 오식에 의한 전쟁발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3.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정책의 출발점은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인식으로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남한정책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 국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북한을 한국에게 주로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간에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인 반면에, 중국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향후 2~3년의 남북관계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비교·분석해보면 두 가지 점이 발견된다. 첫째, 일본, 중국 및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입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 향후 2~3년의 남북관계가 다소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한국은 주로 교류·협력문제를, 북한은 정치·군사문제를 중시해 왔으나, 사실 남북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지난 2~3년 동안에도 남북간 교역은 활발히 전개되었다.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에 대해 주변4국 전문가 모두 '경제교류 및 협력분야' 사업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음

은 '군사적 대결 해소'와 '정치적 신뢰구축'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군사적 대결 해소'가 더 중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서는 '정치적 신뢰구축'이 다소 비중이 높았다.

결국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권유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사업 분야는 경제교류 및 협력, 군사적 대결 해소, 정치적 신뢰구축 등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수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주변4국 전문가들은 공히 민간과 정부의 공동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나 민간자율이 아직은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현실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과 정부가 상호협력하에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 인적 교류의 추진방법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점은 인적 교류분야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활동 영역의 확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당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규모 식량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대북 경제지원에도 해당된다. 주변4국 전문가들은 일본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대부분 응답자가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적극 찬성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여타 국가의 전문가들보다 한국의 대북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국보다는 약하지만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100% 찬성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절대로 반대하는 견해는 4개국가에서 모두 없었다.

4.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한반도통일과 관련, 주변4국 모두에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았으며, 소극적인 찬성과 현상유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통일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획득 유도 혹은 적대세력화 방지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소극적 동의 내지는 묵시적 방관이 통일의 외적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변4국을 한반도통일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드는 통일외교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반도통일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4개국 전문가간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한국주도의 남북관계 변화 예상, 북한체제의 능력결여 및 변화가능성, 체제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정책목표인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배경에는 북한체제의 장기적인 지속, 그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필요성 등이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통일 시기와 관련,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이 향후 10~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30년 이내 및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가 없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1/4 가량이 30년 안팎의 소요기간을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비용을 감안한 통일시기와 관련, 한국이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중국의 전문가들은 반대하는 견해가 훨씬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일의 시기에 대한 예상과 연계하여 볼 때, 중국의 전문가들은 타 국가의 전문가들과는 달리 남북한의 통일을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의 통일(대북)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체로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한 전문가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을 뿐 미국과 일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무하였다. 특히 한국정부가 지난 몇 년간 강조한 한·미공조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은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에 심각한 평가와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해서도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전문가는 주변4국 모두에서 아무도 없었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수립 과정과 경로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견

해가 가장 높았다. 미국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도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볼 때, 미국 뿐 아니라 여타 국가의 부정적인 입장 피력은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주변4국에 대한 통일정책의 정확한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미국의 전문가들은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하였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지지는 없었다. 다만, 반수 정도가 두 방안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두 방안 모두에 불만을 표시한 견해도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일본의 전문가들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변4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통일방안에 비해 결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또한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추진하는 북한과 남북관계와 미·북 및 미·일관계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남한의 정책적 입장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의 입장과 일본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한국이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에 무조건 협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반면,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한관계가 개선되면 협조한다는 조건부 협조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며, 미국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협조와 조

건부 협조가 골고루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간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소간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한국정부가 계속 견지해 온 한·미·일 공조체제는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견해가 주변4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다소 압박을 준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뤄 타 국가의 전문가들에 비해 한·미·일 공조체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주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미국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변4국 전문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지적하였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경제성장 순으로 우선과제를 지적하였으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정치적 민주화보다 훨씬 중요한 해결과제로서 지적하였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약속해 준다면 그러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체제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체제에 대해, 미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의 입장과 중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매우 대비되어 나타났다. 즉 미국의 전문가들 모두와 일본의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자본주의체제를 바람직한 체제로 지적하였는 데 반하여, 중국의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를 선호하였다. 러시아의 경우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바람직한 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를 지적한 응답자는 주변4국 모두에서 아무도 없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조사목적 1

2. 연구방법 3

Ⅱ. 주변4국의 한반도정책 평가 6

1. 미국 6

2. 일본 11

3. 중국 15

4. 러시아 21

Ⅲ. 조사결과분석 1: 국가별 분석 29

1. 미국 29

2. 일본 42

3. 중국 49

4. 러시아 57

Ⅳ. 조사결과분석 2: 교차비교분석 67

1.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 67

2.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 76
3.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89
4. 통일정책에 관한 인식 100

V. 요약 및 결론 118

참고문헌 134

<부록 1> 설문지(국문) 137
<부록 2> 설문지(영문) 153
<부록 3> 설문지(중문) 168
<부록 4> 각국 전문가 명단 174

<도 표 목 차>

<표 4-1> 최근 2~3년간의 동북아 국제정세 평가 67
<표 4-2> 향후 2~3년간의 동북아 국제정세 전망 68
<표 4-3>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영향 69
<표 4-4> 통일외교의 역점 대상국가 70
<표 4-5> 한국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 71
<표 4-6> 북한이 가깝게 지내려는 나라 73
<표 4-7>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74
<표 4-8> 주변국가의 대북한정책 76
<표 4-9> 북한의 식량 사정 77
<표 4-10> 북한의 변화 정도 78
<표 4-11>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개방의 정도 79
<표 4-12> 북한의 장래 81
<표 4-13> 북한의 붕괴가능성 82
<표 4-14>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도 84
<표 4-15> 북한 권력층내의 갈등 정도 86
<표 4-16> 북한의 대남정책 88
<표 4-17>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 89
<표 4-18> 북한은 한국에게 어떤 대상 90
<표 4-19>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 92
<표 4-20>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94
<표 4-21>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사업 95
<표 4-22> 남북 경제협력 추진방법 97
<표 4-23> 남북 인적 교류 추진방법 98

<표 4-24>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99
<표 4-25>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101
<표 4-26> 통일의 방식 104
<표 4-27> 통일의 시기 105
<표 4-28> 통일비용의 부담과 통일시기 106
<표 4-29>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 평가 108
<표 4-30> 통일정책 결정과정 109
<표 4-31>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 평가 110
<표 4-32>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선호도 112
<표 4-33>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대한 협조 여부 113
<표 4-34> 한·미·일 공조체제의 대북 압박정도 114
<표 4-35>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우선과제 115
<표 4-36> 통일 이후 바람직한 체제 117

Ⅰ. 서 론

1. 조사목적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동북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세력재편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역내의 안정적 질서구축에 긍정적인 요인들로는 미·일 신안보관계 구축, 미·러 동반자관계 발전, 중·러관계 개선, 미·일의 대북접근, 한·중 및 한·러관계 발전, 역내 경제협력의 심화,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다.

이와 함께 평화로운 역내 질서의 구축을 위협하는 갈등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한 요인들로는 남북한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 및 잠재적 패권경쟁, 미국과 중국의 암묵적인 상호견제, 조어도(釣魚島) 문제를 둘러싼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과 일본간 갈등, 일·러간 북방도서를 둘러싼 갈등, 러시아의 정세불안, 중국·대만간 갈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 중에서도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 상호의존적인 국제관계의 발전추세가 동북아에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각국은 경제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치·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은 상황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인 우방관계라는 명분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실리추구에 따라 점차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변4국은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질서 구축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및 관여의 폭이 커졌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위기 심화와 이에 따른 체제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틀이 제도화되고 있다. 즉 한반도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제적 논리가 한반도 정세의 전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로 커지고 있다.

특히 주변4국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이해관계 및 향후 한반도정세 변화가 자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략적 판단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는 향후 한반도 통일문제에 상대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급격한 붕괴없이, 그리고 통일에 따른 유상적·무상적 부담을 가급적 완화하면서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전략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통일과정에서 어떻게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주변4국의 한반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각국 전문가들의 한반도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주변국 통일외교정책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통일추진과정에서 주변4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가.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방법이다. 주변4국의 한반도 정세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인식과 정책을 경험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현직에 있는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들을 면접·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인식과 정책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평가 등에 있어서 완전히 투명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의 경우 정치적·외교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4국의 한반도정책은 공식 정책 문건,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발언 자료, 2차 분석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선 국가별로 그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이 결과를 교차비교분석한다. 주변4국의 전문가 의견은 ① 통일환경, ② 북한정세, ③ 남북관계, 그리고 ④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총 38개 문항: <부록 1> 참조)들로 구성된 설문지(영어 및 중국어: <부록 2> 및 <부록 3> 참조)를 통하여 구하였다.

통일환경에 대한 문항은 동북아 정세의 변화, 남북한의 주변국과의 관계 및 통일외교와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북한정세와 관련한 문항은 김정일정권의 안정성 및 북한의 개혁·개방의 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남북한관계와 관련해서는 향후 개선의 가능성, 바람직한

방향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향후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알고자 하였다.

설문결과의 분석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이 각 국별로 선택한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여 그 중 회송된 설문지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참여 연구진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 면담자료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결과분석은 우선 각 국별로 위에서 언급한 4개 영역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4개국가의 입장을 교차비교분석하였다.

나. 조사개요

첫째, 설문대상자의 규모는 조사여건, 비교의 객관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4국 각기 20명씩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차 설문과정에서 응답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5명을 추가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달하고 응답지를 우편으로 회송받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제약점 때문에 참여 연구자가 직접 출장하여 현지 인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작업(1996. 11~12)을 수행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참여 연구자의 현지 체제기회(1997. 3~8)를 활용하여 설문지 회수와 더불어 직접 면담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둘째, 대상 전문가들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연구, 논문, 논평 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사들 또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책입안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되 참여 연구진의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셋째, 설문조사기간은 1차로는 대상전문가의 접근가능성, 우편회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1996년 12월 초부터 1997년 2월 말까지로 선정하였다. 미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중국 전문가들의 경우는 해당 연구자가 현지출장하여 11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미국 및 일본의 경우, 회송율이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4월 말까지로 연장하였다. 연구진은 설문지의 문항이 현안문제를 묻는 미시적 항목보다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거시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사기간의 연장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각 국별로 응답자의 수는 미국 12명(이중 1명은 북한에 관한 항목들에만 응답하였음), 일본 9명, 중국 18명, 러시아 15명이다. 각 국별 설문조사 전문가의 명단은 <부록 4>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누가 응답하고 누가 응답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응답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하되, 그 대신 소속 기관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규모에 비추어, 본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는 그 성격상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국의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는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전문가들이 비교적 한반도 통일문제에 정통하며, 따라서 설문결과가 각 국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관한 추세를 비교·평가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섯째, 설문결과의 분석은 원칙적으로 설문지의 응답을 기초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중국과 미국의 경우, 참여 연구자들이 현지출장 또는 현지체류의 기회를 활용하여 참여 전문가들의 일부분 및 비참여 전문가들을 직접 면담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면담자료를 보충적인 해석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Ⅱ. 주변4국의 한반도정책 평가

1. 미 국

1990년대에 들어 미국은 냉전체제의 종식, 미국방예산 감축의 요구 등 새로운 안보상황에 직면하여 대아시아 안보정책을 검토하는 두 차례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1] 두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전진배치방위전략(forward based defense posture)이 재평가되어야 하며, 금세기말까지 이 지역주둔 미군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을 구상하였다.[2]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속에서도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한다는 목표[3]하에 1993년 10월 「밑으로 부터의 검토」(Bottom-Up Review)에 의거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여 승리하는 Win-Win 전략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방정책을 제시하였

---

1) 첫번째의 보고서는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P.O., April 1990)이며, 두번째의 보고서는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199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2)이다.

2) 다만, 2차보고서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1차보고서에서 제시된 3단계 주한미군 철군계획에서 제2단계 철군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199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2), p. 13.

3) 이러한 견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John Ikenberry, "The Myth of Post-Cold War Chaos," *Foreign Affairs* (May/June 1996) 참조; 아이켄베리의 주장의 핵심은 냉전 이후의 질서가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연장으로서 미국은 이와 같이 서방질서로 통합된 세계질서 속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4] Win-Win 전략은 아직도 현실적 운용성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나,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동과 함께 아시아(특히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어 미국은 1994년 7월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5]

동북아에 대한 국가전략은 안보상의 전통적 우방국가에 대한 "협력적 개입"(cooperative engagement) 전략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및 체제전환 국가에 대한 자유시장·민주주의의 "확대"(enlargement) 전략의 구체화와 개입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를 구축하는 것이다.[6] 특히 미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고려할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4) Les Aspin, *Report of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1993) 참조.

5)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세계적인 개입을 유지하고,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우선 강력한 안보의 증진을 위해서 냉전 이후의 안보상황을 참작하여 다양한 전략의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규모와 준비태세의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강력한 방위력을 유지하며, 해외주둔을 지속한다. 다음으로 경제번영을 위해서는 지구환경 차원에서 건실한 경제성장과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외국시장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요구하기 위한 활발하고 통합된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민주주의의 공동체를 보호·공고화·확대함으로써 안보를 증진시키는 민주주의를 확대한다.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P.O., 1994) 참조.

6)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 이후 외교정책에 관한 첫 주요 연설인 오스트레일리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96. 11. 20)에서 재확인되었다. *New York Times*, November 21, 1996.

하고, '포괄적 개입전략'(comprehensive engagement)의 틀 속에서 '예방적' 차원의 중국 견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7]

미국이 주도하는 「신태평양공동체」의 핵심은 동북아로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과 함께 이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중요시하여 이에 대한 미국의 사활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과 확대의 국가전략에 입각한 대동아시아 정책구상은 1995년 2월에 발표된 「미국의 동아·태지역 안보전략」 보고서[8]로 재정리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동아시아지역에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 전진배치된 현 수준의 미군(약 10만명)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국방예산의 삭감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미군주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이다. 동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동맹관계가 대아시아 안보정책의 요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9]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관계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정

---

7) 박건영,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 「국가전략」, 제2권 2호 (1996년 가을·겨울), pp. 16~17.

8)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P.O., February 1995).

9) Ibid., p. 10; 그리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미국은 금년 4월 일본과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 바, 동 선언은 아·태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국의 역할을 분담할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96년 12월 2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각료급 안보협의위원회에서 재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1997년 9월 완료한 바 있다.

에 여전히 중요하며, 정전협정 및 정전체제가 적절한 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전협정의 대체는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 이후에도 지역안보를 위해 한국과 강력한 방위동맹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10]

한편 미국은 북한을 이 지역의 불가측성과 잠재적 위험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여전히 대규모의 공세적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등을 가지고 한반도의 안정에 대한 위협은 물론 아시아지역 질서 및 전세계적 차원의 핵비확산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체제의 전반적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급격한 붕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잠재적 적국이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부담 경감과 동시에 주둔국들과 방위비, 책임 및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미군의 주둔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확대전략을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대가로 북한과 경수로 2기 건설, 대체에너지 제공, 그리고 관계개선에 합의하고, 대북 쌀지원에 적극적 입장을 보인 것, 4자회담 및 제네바합의 이행과 북한 잠수함사건 해결을 분리하여 추진하려는 것 등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례이다. 이러한 대북접근은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기존의 전력만으로는 운용하기 어려운 Win-Win 전략의 운용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0) Ibid.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일단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과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을 당분간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로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정책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대북한 접근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북한카드'를 확보하려는 맥락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북·중관계에 미국이 관여할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장래에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경우 북한이 전략적 효용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1]

결국 미국은 한반도에서 한국과의 기존의 쌍무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안보상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북한 접근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한·미 군사관계에도 점진적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아·태 다자안보구상의 대두 배경은 기존의 쌍무적 안보메카니즘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군비경쟁 등 지역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기존의 이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과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중심으로 다자안보협의와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다자안보를 통한 "협력적 개입"으로 아·태 지역의 지도자 역할 및 정치·안보·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라는 대화, 협상, 군비통제의 예방 외교를 통해 분쟁의 방지와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12]

---

11) 박건영,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 p. 17.

12) 「협력적 안보」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는 호주의 외무장관이었던 Gareth Evans, *Cooperation for Peace: The Global Agenda for the 1990s and Beyond* (London: Allen & Unwin, 1993) 참조; 그리고 미국측의 구체적인 구상에 관해서는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John D. Steinbruner,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태 다자안보협력의 요소로는 협의를 통한 상호안정 증대, 핵비확산,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비감축, 군사투자와 확산에 대한 제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들 수 있다.[13]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모든 지역국가들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동시에 잠재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견제하고자 한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국과도 군사적 화해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의 쌍무적 관계 이외에도 다자간 안보협의와 협력을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4자회담」을 한국과 공동으로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일 본

현재 일본은 '21세기의 정치대국 일본'을 위한 국가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외정책 및 대한반도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정치대국화를 위한 국가전략의 틀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대외전략은 UN의 깃발아래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전략에 따른 미국과의 책임분담 이행과 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정치대국으로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대국화를 위한 전략구도는 글로벌 차원(global

---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2); Janne E. Nolan, ed.,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4) 참조.

13) *1994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Draft), 6 May 1994.

level), 지역적 차원(regional level), 국내적 차원(domestic level)으로 구성되어 있다.[14].

글로벌 차원에서의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은 탈냉전기를 맞아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는 UN중시의 전략과 더불어 UN의 깃발아래 전개되는 것이다. 일본의 신보수계 정치지도자들은 대체로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와 관련하여 UN중시의 대외정책을 강조하였고[15], 외무성 또한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가장 중요한 외교과제로 정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금년 가을의 UN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일본의 정치대국화 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강대국으로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아시아를 중요시하는 대외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군사-안보"차원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교류를 촉진시켜 상호투명도를 높여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속에서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미일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는 1996년 4월의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다. 즉 일본은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하여 미일안전보장체제가 새롭게 구축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및 영향력의 증대는 (1) 대국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의 확보 (2) 확대·발

14) 배정호, "일본신보수세력의 등장과 대외정책 전망," 산업연구원 편, 「일본의 정책변화와 장래」 (서울: 산업연구원, 1996) 참조.

15) 細川護熙, 「日本新黨 責任ある變革」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3.); 橋本龍太郎, 「VISION OF JAPAN」 (東京: KKベストセラーズ, 1993);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참조.

전된 미일안전보장체제와 "대국 중국"과의 공존 (3)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일본의 중요한 「21세기의 전략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정치대국화를 위한 대외전략의 틀내에서 일본은 대한반도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즉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 및 억제력을 확보하는 데 한국 및 통일한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는 일본에게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기조는 (1) 한반도에 전쟁 등의 발발로 인하여 위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2) 일본에 적대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며, 아울러 (3)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통일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고, 아울러 한국의 흡수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통일비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일본 의존도는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일본이 주변국로서 대체로 한국의 통일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한·미·일공조체제의 틀속에서 한국과의 협조하에 전개되고 있다. 1997년 5월경의 북한·일본 관계의 상황은 (1)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2)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배치 의혹사건 (3)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으로의 각성제 밀수사건 (4)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인 처들의 귀향문제 등으로 일본이 대북한정책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정체상태에 빠졌으나, 북경 심의관급회담 개최(8월), 북송 일본인처 고향방문 합의(9월) 등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문제가 결정(10월)됨에 따라 경직된 북·일관계는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97년 10월 7일에 열린 자민(自民)·사민(社

民)·사키카게 연립 3당 간사장회의에서는 북송 일본인 처 방일 추진, 2700만 달러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등으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국교수교를 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방북 대표단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연립 3당 대표단의 방북으로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가 일단락될 경우, 북·일수교협상과정의 난제는 「배상 및 보상」 문제만 남게 된다.

최근 북한이 북·일관계 개선 및 수교협상의 재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하시모토 정권 또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신뢰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라시아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북·일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가까운 시일내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일간의 국교정상화 문제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하더라도 (1)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북관계 (2)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미국의 양해가 없이는 북·일관계의 정상화가 미·북관계의 정상화보다 앞서 이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한국으로서는 일본정부에게 지난해 하시모토 총리가 밝힌 대북정책 3원칙, 즉 (1) 남북관계와 '조화와 병행' (2) 수교전 대규모 경협 불가 (3)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대북한 수교를 위한 접근이 한국의 대북 전략·정책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중 국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기조는 안정과 평화유지 그리고 영향력 확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한반도 사태는 중국의 경제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한 바가 있으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본 그리고 경제발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1996년 한·중간의 교역량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발전하였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경제 집단화 추세와 미국과 유럽공동체의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시장다변화 차원에서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교류·협력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침체 상태에 처하여 「벼랑끝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이 일단 유사시에 모험행위를 강행하게 될 경우에도,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은 결정적인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

중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16] 남북한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한반도의 특성상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이에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제2의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불가피하게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급격한 혼란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16)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입장은 1995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방한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文匯報」 (香港), 1995. 11. 15; 「중앙일보」, 1995. 11. 16.

마찰을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중국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서이다. 1990년 동독이 붕괴된 이후 1년여 만에 소련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던 사실을 중국의 지도자들은 예사로이 보지 않고 있다. 한반도와 중국이 순치관계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와해될 경우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은 북한의 내부 정치·경제적 혼란 악화를 방지하여 한반도에서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17]

다음으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모색하려는 전략의 일환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미·일의 외교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18]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범위로 간주하여 왔고, 공산주의 정권수립 이후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여 왔다. 중국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반격을 가하게 되자 동년 10월 인민해방군을 한국에 파병하였던 것도 북한지역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즉 마오쩌뚱(毛澤東)은 미군의 38선 월경을 중국

17)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중앙일보」, 1997. 5. 13.

18) 한반도에 대한 중·미의 이해대립에 대해서는 신상진, 「鄧小平사후 中國의 국내정세와 한반도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75~78;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 April 1997), 30~31 참조.

의 세력범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소련이 붕괴된 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미국과 중국간 대결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서도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즉 한반도는 다가오는 21세기에도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국가로 편입되는 상황이 도래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1994년 10월 21일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가 이루어진 후 북한과의 관계개선 정책을 적극화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국제고립 타개가 한반도의 비대칭적 대외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대북한 진출정책을 순수한 의도로 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한 관계 개선 추진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정책이 1994년 이래 대만과의 관계격상 정책 추진, 1995년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 1996년 일본과의 신안보선언 채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9]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한에 대한 적극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1994년 11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장쩌민(江澤民)과 리펑(李鵬), 챠오스(喬石) 등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방문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며, 중국이 한국카드를

19) 「文匯報」, 1997. 4. 11

활용하여 미국과 북한간 관계개선의 속도를 견제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정치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과도 1992년 이래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 7월 북·중 우호협조 상호원조조약 체결 35주년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 남포항에 북해함대 소속 함정을 파견하는 한편, 뤄깐(羅幹) 국무원 비서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10만톤의 곡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1997년 북한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북한에게 7만톤의 식량을 추가로 무상 원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처럼 북한이 미국의 세력권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에 대한 기본 정책자세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단국으로서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현상과 안정유지를 더 바라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단문제를 해소한다면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20] 중국이 공개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분단국이라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남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중국이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리에 천명할 경우, 이는 중국의 현 통일정책의 논리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이 홍콩과 대만문제 해결을

20) "中國支持朝半島平和," 「文匯報」 (香港), 1997. 1. 30; 張庭延, "中國의 對外政策과 南北韓과의 關係," (자유수호 통일 특별강좌, 서울 타워호텔, 1997. 5. 2) 참조.

위해 제시해 온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방안은 대만주민들에게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장차 통일한국과의 선린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경우, 이는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확대 정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대내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정세를 조성하는 데 두고 있는 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경우, 자신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분쟁을 일으킬 경우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1]

또한 중국은 한반도문제가 남북한 주도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며, 주변국의 역할은 단지 보조적 차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고,[22] 특히 대만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이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깊이 개입할 경우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영향력 확대를 유도하는 반

21)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 (1997), p. 253 참조.

22) 錢其琛, "始終不愉地奉行獨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 「求是」, 1995年 第12期 (1995. 6), pp. 4~5.

면,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내적으로는 한반도가 통일되기 보다는 분단된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더 부합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한반도에서 남북한간 분단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한반도 현상파괴로 보고 있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간에도 군사충돌 또는 영향력 확대 경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혼란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군사부문에 동원하도록 하고 대미·일관계 악화를 유도함으로써 자국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통일을 결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 남북한의 국력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통일될 경우 중국 자신의 체제안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개방정책을 채택하도록 강력하게 설득·종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국과 미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북 개방유도 정책을 북한 흡수정책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23]

중국내 소수민족문제도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접경지역인 동북삼성 지역에는 약 190만에 달하는 조선족이 집단 거주하

23) Zhao Gancheng, "China's Korea Unification Policy," (A Paper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Seoul, Hilton Hotel, May 22~23, 1996), pp. 15~16.

고 있다.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소수민족을 한족으로 동화시키는 데 정책의 큰 비중을 두어 왔으며, 특히 1992년 한·중수교로 한국인과 조선족간 접촉이 증대된 후 조선족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통일한국이 변경지역에 등장하게 될 경우, 자국내 조선족들이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국보다 한국을 조국으로 인식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족의 친한화(親韓化)는 중국내 다른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자극할 수 있고 한·중간 영토분쟁을 유발시킬 것인 바,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다.[24]

최근 중·미간 갈등도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주한 미군 등 아시아지역 미군을 지역안정 유지세력이라기보다 중국견제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25]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잔류하고 통일한국이 자국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통일한국을 대중 견제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러시아

1990년 구소련의 급격한 해체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은 러시아

---

24)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p. 539~541.

25) 신상진, 「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와 한반도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77~78; Gaye Christoffersen, "China and The Asia-Pacific," *Asian Survey*, Vol. 36. No. 11 (November 1996), pp. 1083~1084.

로 하여금 냉전적인 대외정책을 유화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형성이 서방의 원조와 자문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도 러시아의 대서방 친화적인 외교노선의 기초로 작용했다. 또한 소련과 같은 적대적인 강국의 출현을 막고 러시아를 세계시장체제에 효과적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과 서방의 의도 역시 서방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형성의 원인중 하나였다. 또한 냉전체제의 종식은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한반도라는 구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러시아는 남한과의 급속한 관계개선을 시도해 왔으며, 남한을 인정하는 두개의 한반도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북·러관계의 중요성은 감소되어 왔다. 특히 상대방의 군사적인 위기시 자동적인 개입조항을 담고 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실질적인 폐기는 러시아와 북한간의 관계의 현실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의 친서방적인 외교노선은 경제개혁의 지체와 국내정치의 보수화에 따라서 최근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나토의 동유럽확대정책을 유럽과 미국의 팽창주의이자 러시아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러시아는 국제적인 영향력의 급속한 상실로 인한 고립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는 개혁초기의 친서방적인 정서가 상당부분 약화되어 있으며, 대외정책 기조도 외교적인 독자성과 기존 영향력의 유지 및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상황도 1990년대초와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개혁의 부정적인 현상이 증가하고 대외적인 영향력 감소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러시아주의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러시아에 팽배하고 있다. 특히 남한과의 경협이 의도했던 만큼 진전되

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4자회담에서 소외되는 등 영향력 감소가 현저하다고 판단하는 러시아는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있다.

러시아 대외정책기조의 변화는 상당부분 러시아의 개혁 지체 및 이와 결부된 국내정치상황에 기인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러시아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동을 초래했고, 이는 현 러시아 정치구도의 기본적 지형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그리고 이들 사이의 중도세력 등 다양한 세력들이 러시아의 정치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현 대통령 옐친진영과 공산당의 쥬가노프, 군부출신으로 강력한 러시아주의를 표방하는 레베드,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야블린스키, 그리고 극우 민족주의자인 지리노프스키 등은 러시아 정치구도의 상징적 인물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본격적인 개혁실시 이후 현재까지의 러시아 정치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급진개혁세력의 약화와 보수민족주의, 그리고 좌익세력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도는 옐친 대통령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지속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개혁세력과 서방에 의외로 받아들여졌던 1993년의 총선에서 친 개혁그룹인 「러시아의 선택」, 「야블로꼬」 등은 약세를 보인 반면, 개혁비판세력으로 분류되는 보수그룹인 지리노프스키의 「러시아자유민주당」, 「러시아 공산당」 그리고 「농업당」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26] 개혁이후 최초로 실시된 1993년의 총선은 급진적인 개혁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시화에 따른 반작용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특히

26)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8 Декабря 1993.

합리적인 정책보다는 과격한 민족주의적 선동에 능했던 지리노프스키의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최다득표를 한 것과 공산당의 선전은 이를 뒷받침한다. 급진적인 개혁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반작용은 이후에도 약화되지 않았으며, 1995년의 국가두마 의원선거는 이와 같은 경향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선거의 경우도 현 정부의 개혁조치들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던 반 옐친세력이 승리했다. 비례의석의 배분을 통해서 157석(34.9%)을 획득한 「러시아 공산당」은 결과적으로 하원의 최대다수당으로 등장했다. 「러시아공산당」은 이와 같은 유리한 입장을 바탕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과정에서 좌파세력을 지원함으로서 전체적인 좌파세력은 하원의 과반수를 점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회에서 「러시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는 옐친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지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산당의 영향력증가는 구 소련의 대외정책기조의 복원과 북한에 유리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증대함을 의미한다.

1996년 대선에서 옐친이 승리함에 따라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 지향적 개혁의 미래는 최소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음으로 해서 치러진 결선투표과정에서 레베드를 합류시킨 옐친은 53.82%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재선되었고, 쥬가노프는 40.31% 획득했다.[27] 그러나 옐친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러시아 공산당」의 쥬가노프의 선전이며, 쥬가노프 지지 투표자들이 40%에 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옐친의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급진개혁세력의 약화와 좌익세력의 입지강화, 보수, 민족주의세력의 부각으

27)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0 Июля 1996.

로 특징지워지는 러시아 정치상황은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좌익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부각으로 특징지워지는 러시아 국내정치세력의 재편과정은 친서방 대외정책의 약화 내지는 수정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지위의 하락과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라는 현실과 결부되어 보다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 사이에 대서방 강경노선의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러시아 국제적 위치를 극명하게 보여준 나토의 동유럽확대안의 타결은 러시아의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미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던 사안이었다. 나토의 확대정책을 러시아가 수용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국제적인 영향력 축소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대서방 유화노선의 재검토를 의미한다.

러시아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정치적인 양보를 통한 경제적인 실리의 추구라는 외교정책이 러시아의 주된 입장으로 견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국제적인 입지 축소와 동북아 지역의 민감한 역학관계에 따라서 한반도의 국제적인 환경도 러시아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안보환경 및 동북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협력추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구소련시절에 버금가는 영향력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이 유일 강대국으로서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 현대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배적 영향력 확보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 일치는 중·러관계의 밀월관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28]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시절과 달리 대한반도정책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의 중심축을 남한으로 이전하는 과정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 국교수립이후 급격하게 개선되어 가는 남한과의 경협강화 과정속에서도 1994년 대통령특사를 북한에 파견하거나, 대북 경수로 지원에 대한 자국의 입장 표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효력을 상실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조약의 추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점 등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29]

남한을 북한보다 우선시하던 러시아의 초기 한반도 정책은 첫째, 한반도 평화의 유지와 동북아의 안전보장 및 중장기적인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형성, 둘째 남북한에 대한 균형잡힌 관계의 유지로 일정 정도 변화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표현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 선린관계를 증진시킨

---

28)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한 나라가 패권정치를 행사해서는 안되며, 국제문제를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재편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등 아시아를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의 입장과 최근의 북·러관계 개선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 1997. 4. 24.

29) 러시아는 1996년과 1997년에 걸쳐서 북한과 다양한 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관계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1996년의 경우 투자장려보호조약 등 4건의 조약체결이 있었고, 1997년에도 여행협정 등 3건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북·러간의 접촉증가는 그 동안 냉각되었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일정 정도 복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30] 최근 러시아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북한과의 긴밀한 정치·군사적인 관계를 일정 정도 회복하여 북한카드를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31]

러시아는 경제개혁 초기에 지향했던 미국식 선진자본주의형태가 자국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성장모델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한국과의 경협에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협의 필요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실질적인 수행과정에서 대외원조와 경협이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인식의 형성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 냉정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대내외 정세와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남한과의 경협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지속이라는 기본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제적인 영향력감소에 따르는 고립이라는 위기의식의 증가와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의 부각에 따라 구소련시절의 영향력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최근 몇 년간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도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4자회담에 관해 러시아가 보여준

30) 강봉구,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1993.3~1995.5):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20권 1호, (1996), pp. 170~171.

31) 최근의 러시아의 대한반도 인식 변화를 나타내주는 단적인 사례는 로디오노프 국방장관의 '한반도 전쟁시 개입'에 관한 발언이다. 이는 군사적인 자동개입조항을 담고 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실질적 폐기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러시아의 태도와는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일보」, 1997. 4. 16.

일련의 냉담한 외교적 자세를 결코 일회적인 것이나 우연한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이 일정 정도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한국정부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대 러시아 교섭력의 확대를 꾀해야 할 때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Ⅲ. 조사결과분석 1: 국가별 분석

1. 미 국

가. 통일환경

<동북아 국제정세>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에 못지 않은 중요한 변수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일 것이다.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변화가 독일통일에 긍정적인 외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서독체제로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가 혼신을 기울인 정책의 하나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전승4국의 독일통일에 관한 정책적 입장을 서독정부의 입장과 조율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최근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년간의 동북아 국제정세를 '다소 안정적'이거나(4명)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2명) 평가하여 응답자의 55%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반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그 절반인 27%(3명)에 불과하였고, 그 밖에 18%(2명)는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내 강대국간의 관계가 비교적 갈등 조성보다는 갈등 해소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가 여전히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미·북 제네바합의로 해결과정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인식 추세는 향후 2~3년간의 동북아 국제정세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즉 응답자의 55%가 향후 정세를 '다소 안정적'이거나(4명) '매우 안정적'일 것(2명)으로 전망하고, 18%

(2명)가 '그저 그럴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 추세가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반하여, 소수의 응답자(27%, 3명)가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다수(55%, 6명)가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그 절반인 3명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명은 '그저 그럴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동북아 국제정세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일을 한축으로 하고 중국을 다른 축으로 하는 동북아 강대국간의 관계는 무역불균형, 중국내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 다소의 갈등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통일외교>

따라서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 가져다 줄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독의 경우 안정적인 분단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대주변국 외교를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결국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외교의 대상국가들로서 미국과 중국을 지적하였다.

응답자 13명(중복 대답 2명)중 8명이 미국이 가장 중요한 통일외교의 대상국가라고 지적하여 역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통일과정에서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고, 4명이 중국을 지적하여 중국 또한 한국의 통일외교에서 핵심적인 대상국으로 등장하였음을 시사하였다. 1명은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일본과 러시아를 지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남북한이 가장 가깝게 느끼거나 지내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 공히 미국을 그러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주변국중 절대적일 것임을 추정하게 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11명중 10명이 한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미국을 지적하였고, 11명중 8명이 미국을 북한이 가장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나라로 지적하였다. 그 밖에 한국의 경우 1명, 북한의 경우 3명이 중국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점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공조에 입각한 대북정책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체제생존의 방편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 상당한 정도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강력한 후원국으로 남아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다소 약하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중국과 최소한 기존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한 평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와 면담한 몇몇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소한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전략

적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북한으로서도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결국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4국중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만큼 미국에 대한 남북한의 외교적 각축전이 전개될 것임을 예상케 해 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국 및 일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외교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1명) '통일을 지연'시키기 보다는(1명) '통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8명)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주변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현재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유도를 목표로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정부도 매우 경직된 북한사회주의체제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공식적 정책이나 입장과는 상당히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응답자(7명)가 주변국들이 현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1명은 북한체제의 유지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국 전문가들의 대다수인 73%가 주변국들의 북한체제 변화 유도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단지 응답자의 27%(3명)만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평가하였다. 미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인식은 주로 중국의 정책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필자와 면담한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주로 관망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 북한정세

<북한체제 일반>

북한의 장래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인식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북한이 '당분간 그럭저럭 생존'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붕괴단계에 진입'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붕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되어 있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거나(9명) '조금 부족'하다고(3명) 응답하여 모든 응답자들이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농업생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최근 2~3년간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변하고 있거나'(1명) '약간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7명)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4명)보다 두 배가 되었다. 북한의 변화를 지적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 등 제한적이지만 경제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예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12명)가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이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여 경제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그럭저럭 생존'할 것으로 응답한 전문가가(7명)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5명)보다 다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압도적인 다수가 북한이 '붕괴단계에 진입'해 있거나(8명) '5년내에 붕괴'될 것으로(2명) 예상하였다.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는 소수(2명)에 불과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지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르겠다'고 응답한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1명)하거나 '다소 지지한다'(7명)고 평가하였으며, '다소 반대'한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1명에 불과하였다. 1명은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일 체제가 식량난, 경제난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 지배하의 북한권력층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에 강·온파가 존재하며 그들간에 다소의 갈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응답자 13명(복수대답 1명) 중 10명이 '북한권력층내에 강·온파가 존재'하며 그중 9명은 '다소의 갈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강·온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응답자는 2명에 불과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는 근거로 미·북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이 보여준 행태를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 권력층내의 강·온파간 갈등이 권력내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전문가도 있었다.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의 대남정책 자세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북한이

남한과의 공존을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2명의 응답자가 '북한이 남한과 공존을 원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1명은 '북한이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대부분(9명)은 '북한이 자기식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나 그럴만한 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대부분이 '별로 없다'(11명)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한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한미동맹이 북한을 억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상황이 전면적 차원의 전쟁을 일으킬만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몇몇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위기상황에서의 오판이나 오식에 의한 전쟁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북한 체제비교>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한이 자유, 평등, 자주 등 가치 및 체제유지 메카니즘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력, 경제 등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을 앞서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극소수의 응답자가 북한이 평등(1명), 자주(2명), 군사력(1명)의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에 우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체제경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북한이 남한의 경쟁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성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직장생활, 여가생활에서는 이질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언어, 가족생활, 풍습에 있어서는 '약간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1명만이 언어의 측면에서 남북한간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현황이나 미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물음은 한국에게 북한은 어떠한 대상인가 하는 것이며, 역으로 북한에게 한국은 어떠한 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정책의 출발점이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속에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게 어떠한 대상인가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북한이 한국에게 어떠한 대상인가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인식은 다소 혼재되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2명중 1명은 북한이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이라는 모든 항목에 응답함으로써 북한이 한국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을 보여 주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든 측면이 해당됨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에게 북한은 한국에게 '지원대상'(4명) 또는 '협력대상'(2명) 이라는 우호적인 대상으로서 보다는 '경계대상'(5명), '적대대상'(3명) 또는 '경쟁대상'(2명)이라는 비우호적인 대상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그 동안의 남북관계 및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동안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남북당국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등한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측의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여 주었다. 북한당국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1명을 제외한 10명이 '북한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향후 2~3년의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소 우세하였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 2명을 제외한 10명중 6명은 '다소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4명은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북한당국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한 현실과 남한의 정책추진에 따라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어느 특정분야에 견해가 모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제교류 및 협력,'(7명) '군사적 대결 해소,'(5명) '체육·문화분야 교류,'(4명) '정치적 신뢰구축,'(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포함). 북한의 군비축소와 경제개혁을 촉구해야 한다고 특별히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다.

현재 한국정부는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협력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당국의 공식적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응답자 11명중 9명이 지원에 찬성('적극 찬성' 2명, '대체로 찬성' 7명)하였는 데 반해,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남북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법

으로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기(2명) 보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부분이 동의하였다(8명).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추진하면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 '경제협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을 한 전문가도 1명 있었다.

남북간 경제협력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간의 인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법도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거나(2명) '민간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기(3명) 보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6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라. 통일정책

한반도 통일은 결국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제3국인이 적극성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 실현에 대해 적극적이기 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응답자 모두가 남북한의 통일이 실현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현상유지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통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미국의 이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북한체제와의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혼란이나 그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급격한 통일시의 후유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한반도 통일의 방법에 대한 인식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응답한 1명과 '모르겠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 9명이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최근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예상하면서 통일의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시기에 대하여 미국의 전문가들은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한 반면에, '20년 이내'가 6명, '10년 이내'가 3명으로 대체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동구사회주의국가에서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급격한 전환이 쉽게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모두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못하고 있다'(8명) 또는 '매우 못하고 있다'(2명)고 평가함으로써 거의 모든 응답자가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필자가 면담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명백한 비전제시나 구체적인 방법상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통일정책과 관련한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결핍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

한 인식에서 거의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즉 모든 응답자(11명)가 한국의 통일정책이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1명은 중복응답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다고 대답하였다.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 또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는 '매우 못하고 있다'(6명) 또는 '대체로 못하는 편이다'(3명) 라고 평가하였다.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방안이 좋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었고 6명이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5명의 응답자가 '두 방안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나 대북 식량지원문제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향후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북한의 대미·일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생존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대미관계(및 대일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와 병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동안의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보면 이러한 입장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1명의 응답자중 9명이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하였는 데 반해, 단지 2명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불리' 1명, '한반도 통일지연' 1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정부가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6명) 또는 '남북한관계가 개선되면 협조'한다(5명)고 응답하여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한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동안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온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것('매우 압박을 준다' 1명, '다소 압박을 준다' 8명)으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두 명의 응답자도 '그저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여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에 대하여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앞서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대부분이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현상유지 선호 내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이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본 문항에 응답한 10명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다. 그밖에는 '모르겠다'(1명) 또는 '한국사람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자기자신의 의견을 따로 표명한 사람이 있었다.

한편, 한국사회가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는 '정치적 민주화'(8명)와 '경제성장'(5명)이 지적되었다(중복 응답 2명).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은 정치 및 경제적으로 건강한 국가가 이루어졌을 때, 통일의 길이 가까워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동구 및 구소련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진 후 자본주의체제가 등

장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명분하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등장할 체제에 대하여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모두가 자본주의체제를 바람직한 체제로서 지적하였다.

2. 일 본

가. 통일환경

<동북아 국제정세>

최근 2~3년간의 동북아 국제정세에 관한 일본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인식은 '다소 안정적'이거나(2명) '그저 그렇다'는(4명) 인식이 대부분이고, 소수가 '다소 불안정'하다는(2명)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의 동북아 국제정세에 관해서도 다수(5명)는 '다소 안정적'이거나 '그저 그럴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소수(3명)는 '다소 또는 매우 불안정'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8명) '다소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1997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북·일 심의관급회담을 계기로 북송 일본인 처 고향방문합의, 일본의 2700만 달러의 대북식량지원 결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일관계가 다소 개선되어지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주변국가의 대북한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7명)가 북한체제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통일외교>

한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대다수(5명)는 '미국'을 지적하였고, 그외 소수는 '중국'(2명)과 '북한'(1명)을 지적하였다. 또 북한이 가장 가깝게 지내려는 나라에 대해서도 거의 대다수(6명)는 '미국'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3명)을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에 가장 중요한 주변국가로는 대다수(8명)가 '미국'을 꼽았고, 극히 소수(1명)만이 '중국'을 거론하였다.

나. 북한정세

북한에 장래에 대해서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나누어지고 있다. 즉 4명은 '그럭저럭 생존'해 갈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다른 4명은 '경제난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붕괴과정에 있다는 설문과 관련해서는 6명이 '붕괴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고, 2명은 '5년내에 붕괴'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즉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에 장래에 대해서 대체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북한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은 북한은 자기의도대로의 대남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는 진단으로 연결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된 설문에서 5명은 '북한은 자기식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나 그럴만한 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2명은 '북한이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최근 2~3년 동안 북한의 변화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 4명

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고, 4명은 '약간 변하였다,' 1명은 '많이 변하였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즉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2~3년동안 북한은 그다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에 관련된 설문에 대해서는 9명 모두 김정일정권 아래에서 북한은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5명은 '조금 부족'하다고 답변하였고, 4명은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즉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모두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약 500만톤 정도의 잉여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북한 접근 및 관계개선에 식량지원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일체제>

김정일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즉 '다소 지지'한다는 답변이 4명, '적극 지지'한다는 답변이 2명,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는 답변이 2명, '다소 반대'한다는 답변이 1명이었다.

그리고 북한 권력층내에 강·온파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5명은 '갈등이 다소 있다'고 답변하였고, 2명은 '갈등이 없다,' 1명은 '갈등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다. 남북관계

북한이 한국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계대상'이라는 인식을 나타내었

다. 즉 5명은 '경계대상,' 2명은 '협력대상,' 1명은 '경쟁대상,' 또 다른 1명은 '지원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2~3년내 남북한관계에 대한 전망에 관해서 4명은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2명은 '오히려 악화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그 외에 2명은 '다소 진전'될 것이다, 1명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중 대다수는 남북관계가 앞으로 2~3내에는 획기적으로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비교>

남북한 비교설문에서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자유,' '평등,' '자주,' '민주,' '도덕,' '문화·예술,' '인권,' '경제'분야 등 전분야에서 남한이 우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몇몇 소수자는 '자주,' '평등,' '도덕'분야(2명)나 '문화·예술'분야(3명), '군사력' 분야(1명)에서 북한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묻는 설문에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언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6명) '풍습'면에서는 이질화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지만, '직장생활'(6명), '여가생활'(6명), '가족생활'(5명)에서는 이질화의 정도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직장생활'의 이질화가 큰 것(6명)으로 응답하였다.

라.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

남북한 통일에 관한 설문에 대해 4명은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3명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하였으며, 1명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즉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의사표명은 하지 않은 반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의사표명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10년'(3명) 또는 '20년'(4명)이내에 통일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통일방식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5명) 또는 '남북한에 의한 평화적 통일'(2명)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통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1명). 또 통일방안과 관련된 설문에 대해서는 3명이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하였고, 3명이 '북한의 「연방제」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1명은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통일비용과 관련된 설문 즉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에 대해서 1명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4명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3명은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통일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북한과 미·일과의 관계개선>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미칠 영향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대체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5명). 그 외의 소수의견을 보면, 2명은 '불리할 것'으로 보았고 1명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한국정부가 취할 태도와 관련된 설문에 관해서는 2명은 '무조건 협조'

해야 된다는 응답을 하였고, 6명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은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미·일 공조체제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에게 압박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즉 4명은 '매우 압박을 준다'고 답변하였고, 4명은 '다소 압박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1명은 '미국은 매우 압박을 주고, 일본은 다소 압박을 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통일정책>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즉 4명은 '대체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3명은 '보통'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4명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2명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고 2명은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정책(방안)의 형성 및 결정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세가지 견해로 나타났다. 즉 3명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은 '국내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3명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북한의 통일방안(대남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대답하였다.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업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 3명은 '군사적 대결해소,' 3명은 '경제교류 및 협력,' 2명은 '정치적 신뢰구축'을 주장하였다.

또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한 한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에 관한 설문에 관해서도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5명은 '대체로 경제지원을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3명은 '대체로 그저 그렇다,' 1명은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북한당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원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3명은 '그저 그렇다,' 3명은 '대체로 원하지 않는다,' 2명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추진에 대해서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거의 대다수(5명)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단지 1명만이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한간의 인적 교류에 대해서도 거의 대다수(7명)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명만이 '정부주도하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나 인적 교류에 대해서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다수는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즉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 5명이 '경제성장,' 1명이 '지역감정,' 1명이 '정치적 민주화,' 1명이 '세대갈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대다수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지지하였는데, 한반도 통일이후 어떤 체제가 바람직한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도 거의 대다수(7명)가 '자본주의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단지 1명만이 '사회주의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3. 중 국

가. 통일환경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18명중 11명) 향후 2~3년 동안 동북아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와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지역국가들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써 지역질서가 다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한·중 국교정상화도 지역질서의 다극화 추세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극화 추세는 동북아 질서의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전문가들은(18명중 6명) '향후 동북아 정세를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하였다. 중국은 지역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 움직임도 동북아정세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중국견제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중·미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중·미관계의 긴장은 동북아정세를 낙관할 수 없게 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미·일간의 「신안보공동선언」 채택을 통한 동맹관계 강화도 지역질서 안정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한·미 군사동맹도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한·미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냉전 이후 시대에 걸맞게 조정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18명중 14명) 향후 전개될 동북아질서가 한반도 통일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단지 설문조사에 응답한 18명중 4명만이 향후 동북아 정세가 한반도통일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동북아 정세가 한반도 통일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미관계의 불안정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통일실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외교대상으로 미국과 중국을 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전문가 18명중 14명이 '미국과 중국을 동일하게 중시해야 한다'고 응답한(미, 중 각기 7명) 점이다. 한편, '한반도 통일을 희망하는 주변 강대국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4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중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여기는 나라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18명중 16명의 전문가가 '미국'이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명의 전문가는 '중국'이 한국인이 가장 가까이 여기는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이 가장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는 나라가 어디인가라는 설문에 대해서, 거의 모든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일부 분야에서 중·북한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지만, 중·북한 양국은 여전히 상대방과 전략적 유대관계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도 중국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각종 원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로 미국을 지목한 전문가가 2명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중·북관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북한의 국제고립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중국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할 경우, 이는 북한의 대외자세를 보다 유연하게 유도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희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7명의 전문가들은 주변국이 '북한의 체제변화 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북한체제 생존을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5명이 있었다. 한편, 5명의 전문가는 주변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나. 북한정세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심각한 체제위기를 겪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붕괴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 권력층내에 강온파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갈등이 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과거 2~3년 동안 북한의 변화 시도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거나 '약간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데 동의한 전문가들이(10명) '별로 변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에 찬동한 사람보다는(8명) 약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아주 심각하다는 데에는 일치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1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이 북한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중국의 학자들은 1950년대말 수 많은 중국인들이 아사했을 당시에도 중국정부가 하루 6~700g 정도를 배급해 주었으나, 최근 북한은 주민들에게 하루 300g 정도 밖에 식량을 배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남북한간 체제 우월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 중국의 학자들은 자주, 평등, 도덕면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월'하지만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대체로 '북한이 남한에 비해 열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중국학자들은 자유, 인권, 민주, 경제력 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의견은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군사력이 앞서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일부 학자들은 첨단 군사장비를 갖춘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을 이미 추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남북한간 이질화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언어와 풍습면에서는 '이질화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지만,' 가족, 직장 및 여가생활 면에서는 '남북한간 이질화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특히 중국의 학자들은 남북한간에 가족생활과 직장생활 면에서 '이질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척'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김정일정권 아래서 북한이 개방정책을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조건이 중국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며,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을 완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한이 '붕괴과정에 진입'해 있다는 데 동의한 중국인들은 극히 소수에 그쳤으며, 대다수 중국인들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국학자들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이 경제난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김정일의 정치적 무능에 기인하기보다는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에서 기인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학자들은 북한권력층 내에 강온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노선갈등이 제기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내에서 김정일에 정면 도전하는 세력이 출현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대남 정책자세와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과 공존'을 원하고 있다는 데 보다 많은 답변을 하였다. '북한 나름대로의 통일을 추진하려 하지만, 그럴만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도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였다. '북한이 남한과 공존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는 극히 소수의 학자만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의 학자들은 남북한간 국력대비 면에서 북한이

월등하게 뒤져있고 군량미까지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다. 남북관계

중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현 남북관계가 경쟁 또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에 더 많은 지지를 보였다. 또한 중국의 학자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한이 북한을 지원·협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설문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한국이 어떤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국내 전문가들은 '경쟁·적대적 대상'인 동시에 '지원·협력 대상'이기도 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전문가들이 남북관계를 이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쟁적 관계에 있지만 남한이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북한이 남한과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 사람이 '관계개선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한 사람보다 두배에 달하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교류·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남북간 '정치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치 및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고르게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 중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남한이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

을 제공'해야 하며, 현재의 '정부 주도에 의한 방식'보다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북 지원'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남북간 인적 교류도 '민간 자율'에 의하거나 '정부와 민간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악화될 가능성'보다는 '관계가 개선'되거나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조만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 중국인은 극히 소수(18명중 3명)에 불과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전체의 1/3에 달하였다.

라. 통일정책

다음으로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실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다. 먼저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지만 현단계에서 통일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 현상유지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남북한간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는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로 남기를 바라는 중국의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중국인들은 한반도가 '10년이내'에 통일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한반도 통일이 '20년' 또는 '3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본 전문가들도 상당수 차지하였다. 대부분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일부는 '남북한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관련, 중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남한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하였고, 그 외의 모든 응답자는 '그저 그렇거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모든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일정책이 '그저 그렇거나' '대체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통일정책이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은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보다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더 호감을 보였다. 중국인들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방안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통일정책 형성에 대해서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내 정치적 고려'가 남한의 통일정책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통일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남한의 통일정책이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전체응답자의 1/3을 차지하였다. 특히 남한의 통일정책이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중국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통일비용의 과다 소요에도 통일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한 중국인들의 의견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막대한 통일비용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끝으로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조성해야 할 내부 통일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많은 중국인들이 '남한내 정치 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남한의 통일정책이 '대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상기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남한의 '경제력 신장,' '지역감정 타파,' '세대간 갈등 해소'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한반도 통일 이후 어떠한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본주의체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단 한사람에 불과했다. 중국인의 이러한 인식은 자본주의체제든 사회주의체제든 어떤 형식의 흡수통일에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러시아

가. 통일환경

조사 결과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간의 동북아 국제정세변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응답(46%)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40%)응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다소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쳐 최근 동북아 정세가 대체로 큰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다수가 향후 2~3년동안에도 동북아 국제정세와 통일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53%)되거나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26%)이라고 응답하여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동북아 국제정세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47%), '다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53%)이라는 응답이 나와 응답자 모두 한반도통일에 국제정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32] 또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에 대해서 응답자 모두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함으로서 남북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현 추세대로 큰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의 중요성 및 영향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한국의 통일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서 '미국'(33%)과 '중국'(33%)에 동일한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러시아'(13%)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일본'(0%)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견해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들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며, 따라서 한국의 통일외교도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는 '미국'(80%), '북한'(13%), '중국'(7%)이며, 북한이 가장 가

32) 이와 같은 인식은 응답자의 대다수인 73%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대북한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북한체제의 유지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깝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로서 '중국'(73%), '미국'(20%), '한국'(7%)이라고 응답함으로서 남북한이 공히 미국과 중국에 압도적으로 친화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80%)함으로서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무조건 협조'(80%)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나머지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협조'(20%)해야 한다고 봄으로서 한국정부가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환경과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주변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큰 변화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나. 북한정세

북한정세에 대해서 대체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을 병행하면서 '상당기간 생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응답자의 73%가 북한이 '그럭저럭 생존'할 수 있으며, 23%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북한이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김정일 정권하에서의 개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0%가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라고 했으며, 최근 2~3년 동안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66%가 '약간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이 김정일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면적인 개방의 확대나 후퇴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해서는 '5년이내'의 단기적인 붕괴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붕괴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응답(26%)보다 '붕괴가능성이 없다'는 응답(46%)이 많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결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김정일 정권의 기반이 일정 정도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소 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데 다수가 동의했으며(69%), '다소 반대'하고 있다는 데에는 6%만이 찬성함으로서 김정일 정권이 일정 정도 안정되어 있음에 동의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북한권력층 내부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권력층 내부의 강온파사이의 갈등관계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서 '강온파간의 갈등이 없다'는 점에 다수가(63%) 동의했으며, '강온파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37%)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문제에 응답자 모두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족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다수가(79%) 동의했다.

남북한의 우위를 평가하는 9개 항목중 대다수의 항목에서 남한이 우위에 선 것으로 응답했으나, 몇몇 항목에서는 북한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33]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항목은 평등

33) 응답자들은 경제수준(100%), 민주주의(86%), 자유의 보장(79%), 군사력(73%), 인권상황(73%), 문화·예술분야(73%) 등에서 남한이 우위에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남한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항목 중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79%), 자주(67%), 그리고 도덕(53%)이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남한의 우위응답은 각각 13%, 26%, 33%에 그쳤다. 이와 같은 응답의 배경은 러시아가 아직도 사회주의 시기에 형성되었던 특성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엘리트들의 경우 대다수가 사회주의 시기의 공산주의 교육체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친화력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아직도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표방하고 있고 과거의 우방이었던 북한에 대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는 항목들에서는 북한에 우위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4]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대체로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에 대해서 단기적인 급변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일 정권하에서 제한된 개방정책을 시행하면서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한에 뒤지며, 특히 식량문제가 위기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생존가능성을 상당 부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게 '적대적인 대상'(27%)이거나 '경계대상'(13%)이 아니라 '협력대상'(53%)이라는 점에

만 북한이 우위에 있다는 응답이 소수(13%) 나왔을 뿐 경제수준, 민주주의, 자유의 보장, 군사력, 인권상황등에서는 북한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음으로서 남북한간의 체제비교에서 남한의 절대 우위를 인정했다.

34)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의 친북한적인 여론형성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수가 동의했다. 그리고 향후 2~3년간 남북관계도 '다소 진전될 것'(53%)이라는 응답이 '악화될 것'(7%)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러나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0%에 달했기 때문에 대체로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가 현재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다소 진전되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27%), '20년 이내'(33%), '30년 이내'(20%) 등으로 나타났으나,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 단기적인 급변사태의 결과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간적 경과를 가질 것이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35] 또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20%)보다는 '통일이 되면 좋을 것이나 반드시 통일할 필요는 없다'(47%)라는 응답과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40%)는 반응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남한보다는 북한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방안으로서 '북한의 「고려연방제」 방안이 더 좋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난 반면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더 좋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부가 통일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응답이 60%로 나타나 반대하는 편(20%)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잘하고 있다'(13%)와 '보통이다'(20%)라는 의견보다는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53%)와 '매우 못하고 있다'(13%)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통일정책을 대체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의 1/5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정부의 통일정책수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27%), '보통이다'(27%), '대체로 못하고 있다'(20%), 그리고 '매우 못하고 있다'(27%) 등으로 응답함으로서 한국정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미·일공조체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매우 압박한다' (60%) 거나 '다소 압박을 준다'(40%)고 응답함으로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포함하는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수행에 매우 비판적이며, 상대적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교류 및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대결해소'가 각각 13%로 나타났다. 반면 '체육·문화분야의 교류'와 '이산가족의 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분야의 교류에 대한 응답은 나오지 않음으로서 남북교류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당국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지만,[37] 북한당국이 남한에 대해

36)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통일정책이 '국내정치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다'(40%)는 점에 다수가 동의함으로서 한국의 통일정책이 국내정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민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응답이 27%,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응답이 20%, 그리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응답은 13%에 그치고 있다.

37) 북한 당국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원한다'는 응답

서 경제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적극 찬성' 53%, '대체로 찬성' 47%). 그리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민간이나 정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민간과 정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97%로 압도적이었으며,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와 같은 추세는 경제분야 이외의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한의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이 97%,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7%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의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화'(53%)와 '경제성장,'(47%) '빈부격차'(20%)를 지적함으로서 정치·경제분야에서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에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본주의체제'(47%) 혹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의 혼합체제'(47%)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서 자본주의체제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평 가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서 매우 현실

이 40%, '원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47%, 그리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7%로 나타났다.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최근 2~3년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변화가 없었으며, 현 추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함으로서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정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김정일 정권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개방은 김정일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추세대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식량문제와 같은 북한의 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김정일 정권의 기반이 일정 정도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남북한의 우위를 평가에서는 대다수의 항목에서 남한이 우위에 선 것으로 응답했으나, 몇몇 항목에서는 북한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평등, 자주, 그리고 도덕 등의 분야는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함으로서 러시아가 아직도 사회주의 시기에 형성되었던 특성들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북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한에 뒤지고, 특히 식량문제가 위기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북한체제의 생존가능성을 상당부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한보다는 북한에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방안으로서 북한의 '연방제' 방안이 더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민간과 정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통일의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통일 이후의 체제로서 자본주의체제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조사결과분석 2: 교차비교분석

1.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

가. 동북아 국제정세

냉전 이후 동북아질서의 변화방향은 한반도 통일의 외적 환경으로서 내적 환경 못지 않은 중요한 변수이다. 통일의 내적 여건이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외적 여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통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 주변4국간의 역학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어느 특정국가에 의한 통일 저해 노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표 4-1> 최근 2~3년간의 동북아 국제정세 평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매우 안정적이다	18%	-	-	6%
② 다소 안정적이다	37%	25%	83%	38%
③ 그저 그렇다	18%	50%	-	38%
④ 다소 불안정하다	27%	25%	17%	12%
⑤ 매우 불안정하다	-	-	-	6%

우선 주변4국 전문가들의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최근 2~3년의 동북아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1> 참조). 이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다소 대비되는 양태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본의 전문가들은

과반수가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전문가들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없었으나, 압도적인 다수가 '다소 안정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보다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2~3년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4-2> 참조). 즉 동북아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기 보다는 '안정적일 것'으로(최소 53%, 최대 63%) 예상하였다. 다만 중요한 변화는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 중에서 지난 2~3년전 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본 사람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전문가들중 향후 2~3년의 동북아 국제정세를 다소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항이다.

<표 4-2> 향후 2~3년간의 동북아 국제정세 전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18%	-	-	6%
② 다소 안정적일 것이다	37%	63%	60%	47%
③ 그저 그럴 것이다	18%	-	6%	27%
④ 다소 불안정할 것이다	27%	37%	28%	20%
⑤ 매우 불안정할 것이다	-	-	-	-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3> 참조).

이에 대하여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본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았으며, 중국의 전문가중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1/4에 미치지 못하였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다소 부정적 영향' 또는 '그저 그럴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이 45%나 되어 여타 국가의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영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매우 긍정적 영향	-	100%	11%	47%
② 다소 긍정적 영향	55%	-	60%	53%
③ 그저 그럴 것이다	18%	-	-	-
④ 다소 부정적 영향	27%	-	22%	-
⑤ 매우 부정적 영향	-	-	-	-

나. 통일외교

통일에 유리한 주변환경이 조성되는 데에는 역내 강대국간의 관계가 상호협력 및 의존의 양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능동적인 외교를 통하여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경향에 따라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통일의 저해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

러한 차원에서 대주변국 외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대상국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한국의 통일외교에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4> 참조).

<표 4-4> 통일외교의 역점 대상국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미국	62%	89%	39%	33%
② 일본	-	11%	-	33%
③ 중국	31%	-	39%	13%
④ 러시아	-	-	-	13%
⑤ 없음	7%	-	22%	8%

이 질문에 대해 주변국의 전문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을 가장 중요한 한국의 통일외교의 대상국으로 꼽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일본 응답자의 89%, 미국 응답자의 62%, 중국 응답자의 39%, 그리고 러시아 응답자의 33%가 '미국'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미국' 이외에 '중국'을 중시하였는 데 반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미국' 다음으로 '일본'을 중요한 국가로 지적하였다. 다만, 일본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일본의 중요성이 미국에 비해 매우 낮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을 동등한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또한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도 한국의 통일외교 대상으로

서 양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비중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미국' 62%, '중국' 31%),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비중을 동일하게(각각 39%)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주변국가의 인식은 구체적인 전술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다음 국가 중 한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5> 참조).

이 질문에 대하여 주변국 전문가들은 모두 '미국'을 한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의 인식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응답자의 90% 내외가 '미국'을 지적하였으며, 10% 내외가 '중국'을 지적하였다. 러시아의 전문가들도 81%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친밀도를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다른 주변국 전문가들에 비해 한국의 대미 친밀도를 낮게 평가한 반면, 대중국 친밀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표 4-5> 한국이 가깝게 느끼는 나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북한	-	13%	-	13%
② 미국	90%	63%	89%	81%
③ 일본	-	-	-	-
④ 중국	10%	25%	11%	7%
⑤ 러시아	-	-	-	-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에게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북한'도 한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서 인식되었다. 다만, 일본의 전문가들이 '미국,' '중국,' '북한'의 순서대로 한국의 친밀국으로 지적된 반면에,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중국'보다 '북한'을 한국의 친밀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친밀국가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통일외교에 가장 중요한 대상국가와 관련시켜 본다면, 미국이 한국의 가장 친밀한 국가이자 통일외교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국가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친밀도는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통일에 주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비중을 낮게 볼 수 없는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는 친밀도에 있어서는 무시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인식이 해당 국가 정책담당자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한국의 통일외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고려도 일정한 정도의 비중을 배분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통일외교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의 수준이 중요한 영향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대주변국 관계는 통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은 경제회복의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총체적 차원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여타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주변국 관계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다음 국가 중 북한이 가장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6> 참조).

이에 대한 응답에서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비중에 있

어서는 미국 및 일본의 전문가의 인식과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의 인식이 상당한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을 중시하였는 데 반하여 중국,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표 4-6> 북한이 가깝게 지내려는 나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북한	-	13%	-	13%
② 미국	90%	63%	89%	81%
③ 일본	-	-	-	-
④ 중국	10%	25%	11%	7%
⑤ 러시아	-	-	-	-

이와 같이 현격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과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의 판단의 논거가 다소 상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이 핵문제, 미사일문제, 미군유해 송환문제,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매개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반면에,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접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형제국 또는 지원국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통일외교의 역점 대상국, 한국의 친밀국, 그리고 북한의 친밀대상국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종합해 볼 때, 향후 통일외교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주 대상으로 하여 치열하게 경쟁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접근정책

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통일외교 및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정책형성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통일환경의 변화와 관련,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7> 참조).

<표 4-7>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유리	73%	63%	55%	80%
② 불리	9%	25%	6%	-
③ 한반도 통일지연	9%	-	-	-
④ 영향 없음	-	12%	39%	20%
⑤ 모르겠다	9%	-	-	-

주변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모두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상당한 정도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표 4-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도에 있어서 많은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여타 국가의 전문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으며(39%), 일본의 전문가들 중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 이와 같은 국가별 인식의 차이는 이들 국가에 대한 통일외교정책의 내용이 차별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정책에는 주변국의 한반도정책, 특히 대북한정책이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현재 주변4국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이루기를 바란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4국이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에 상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각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주변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 응답자의 27%, 중국 응답자의 39%만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응답하였다(<표 4-8> 참조). 이에 반해 일본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각각 78%, 73%가 '주변국이 북한체제의 변화유도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현체제를 유지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응답한 미국의 전문가가 64%에 달한 반면에, 일본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각각 22%, 28%가 주변국이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변국이 '현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응답한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 중 각각 28%, 27%는 주변국의 '대북한정책이 북한체제의 변화 또는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에 대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이들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입장과 실질적인 정책이 비교적 조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변국의 공식적 입장과 실제 정책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변국의 대북한정책을 북한체제

의 변화보다는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정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정책에 대한 평가로부터 기인한다.

한편, 중국의 전문가들의 인식은 '체제유지 정책,' '체제 변화유도 정책,' '영향을 못미침'의 세 견해가 상대적으로 균형되게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외교의 역점 대상국 및 남북한의 주변4국에 대한 친밀도와 관련한 질문과 연관시켜 볼 때,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반면, 자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간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이 두 국가에 대한 우리의 통일외교 수행에서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8> 주변국가의 대북한정책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현 체제유지 정책	64%	22%	28%	80%
② 체제 변화유도 정책	27%	78%	39%	73%
③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9%	-	28%	27%
④ 모르겠다	-	-	5%	-

2.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

가. 북한의 상황

지난 몇 년간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등장하여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붕괴와 같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변국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2~3년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킨 식량사정에 대한 견해를 물어 보았다. '귀하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변4국 전문가들은 모두 '매우 부족하다' 또는 '조금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북한의 식량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거나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표 4-9> 참조).

<표 4-9> 북한의 식량 사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매우 부족하다	75%	44%	94%	80%
② 조금 부족하다	25%	56%	6%	20%
③ 부족하지 않다	-	-	-	-
④ 충분하다	-	-	-	-

다만, 식량부족의 정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이 대비되었다. 중국의 전문가들 대부분인 94%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고 6% 정도만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의 전문가들의 경우 '매우 부족' 44%, '조금 부족' 56%로 북한의 식량사정을 중국의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보지 않았다.

북한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내부에서는 분조계약제의 시행, 독립채산제의 확대, 농민시장의 묵인과 같은 변화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의 외교정책에 비추어 볼 때, 식량사정의 완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것도 변화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의 정도, 폭, 속도 등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주변4국 한반도문제 전문가 전체를 두고 볼 때, 응답자의 약 61%가 북한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9%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표 4-10> 참조).

<표 4-10> 북한의 변화 정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많이 변하고 있다	8%	12%	17%	-
② 약간 변하고 있다	58%	44%	39%	67%
③ 별로 변하지 않았다	32%	44%	33%	7%
④ 거의 변하지 않았다	-	-	11%	26%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2/3 정도가 '많이 변하고 있다' 또는 '조금 변하고 있다'로 응답하여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는 비슷하였으나, 러시아의 경우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본 사람도 1/4에 달했다.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44%). 특히 중국 전문가들의 경우는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에 비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다'로 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견해까지 비교적 고르게 나뉘어 나타났다.

북한 전문가들중에는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보다 확대된 개방정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지도부가 확대된 개방정책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에 개방정책은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또한 김정일시대는 김일성시대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향후 북한의 개방정도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의 개방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11> 참조).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모두가 '소극적인 개방에 머무를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소극적인 개방에 머무를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북한의 개방의 확대 가능성 및 그 정도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대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표 4-11>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개방의 정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전면적인 개방	-	-	11%	-
② 소극적인 개방	100%	100%	83%	100%
③ 개방이 후퇴	-	-	-	-
④ 모르겠다	-	-	6%	-

다만,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중에는 김정일 통치하의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도 있어서 다른 주변국가의 전문가들보다는 북한의 개방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구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면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조기붕괴를 예측하는 주장이 있었으나, 북한체제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주변4국의 북한전문가들 및 정책담당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붕괴를 예측하는 주장에서부터 북한체제가 동구사회주의체제의 경우와는 달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북한의 장래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다소 부정적인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중 각각 42%와 50%가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응답자중 6%만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러시아의 전문가들중에는 붕괴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표 4-12> 참조).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다수(각각 61%, 73%)가 북한이 '그럭저럭 생존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이 앞으로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할 것'으로 본 전문가들도 각각 28%와 27%에 달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중에 앞으로 북한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자본주의체제하에 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생존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를 도입

하였으나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그 경험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생존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장래가 어떠한 준거틀로 보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2> 북한의 장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경제난 등으로 붕괴	42%	50%	6%	-
② 그럭저럭 생존	58%	50%	61%	73%
③ 발전해 나갈 것이다	-	-	28%	27%
④ 모르겠다	-	-	6%	-

북한의 장래문제는 곧 북한체제의 붕괴문제와 관련된다. 북한이 당분간 그럭저럭 생존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북한체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이 붕괴과정에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비는 북한의 장래를 보는 시각과 대체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표 4-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응답내용을 자세히 분류해 보면, 북한이 '5년내에 붕괴될 것이다'라고 대답한 전문가의 비율이

미국 17%, 일본 25%인 데 반하여 중국과 러시아에서 '5년내 붕괴'의 가능성을 본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북한이 '붕괴단계에 진입해 있다'고에 응답한 비율은 미국 66%, 일본 75%로 매우 높은 데 반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1%와 27%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 17%, 일본 0%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78%와 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북한의 장래문제에 관한 응답결과(<표 4-12> 참조)와 연계하여 분석해 보면,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붕괴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그럭저럭 생존해 나가거나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록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쉽게 붕괴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여 발전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미국 및 일본, 중국 및 러시아의 인식의 차이는 결국 이들 국가의 대북한정책에서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북한상황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에 따른 차별적 정책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3> 북한의 붕괴가능성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5년내에 붕괴될 것이다	17%	25%	-	-
② 붕괴단계에 진입해 있다	66%	75%	11%	27%
③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	17%	-	78%	53%
④ 모르겠다	-	-	11%	20%

나.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승계가 지연되면서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체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은 김일성 체제의 정통성에 비해 상당히 약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장승길 전 이집트주재 북한대사의 경우처럼 북한 고위층 인사의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엄격한 통제 및 억압체제인 북한에서 각종의 사회적 일탈행위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체제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도가 약화되는 증거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김정일이 김일성과 같은 예언자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최고통치자로서 확고한 권력의 기반위에서 북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지난 6~7년 지속된 경제난의 악화나 식량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구사회주의체제에서 나타났던 주민의 집단적 저항의 조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시되기도 한다. 즉 북한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변4국 전문가들이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의 수준을 어떠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 주변4국 전문가들은 나라에 구분없이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참조).

미국, 일본, 러시아는 '적극 지지한다'와 '다소 지지한다'를 합쳐 각

각 66%, 66%, 69%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들 국가간에는 적극적인 지지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러시아 38%, 일본 22%, 미국 8%의 순으로 나타나 러시아의 북한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북한주민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체제의 지속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응답자의 89%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지지할 것으로 보았는데, 특히 과반수 이상(56%)이 '적극 지지한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주변4국 전문가들은 모두 북한주민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반대의 정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았는데, '적극 반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다소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일본(12%) 이외에는 모두 10% 미만이었다. 그 밖에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라고 평가한 전문가가 러시아 25%, 일본 22%, 미국 8%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이 체제의 속성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김정일 체제는 북한주민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지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의 난국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4-14>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지지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적극 지지한다	8%	22%	56%	38%
② 다소 지지한다	58%	44%	33%	31%
③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8%	22%	-	25%
④ 다소 반대한	8%	12%	6%	6%
⑤ 적극 반대한다	-	-	-	-
⑥ 모르겠다	17%	-	6%	-

일반적으로 독재체제에서는 일반국민들의 정권(또는 체제)에 대한 지지도 여부보다도 권력엘리트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수준, 권력엘리트의 응집력 정도 등이 체제의 정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유일지배 독재체제인 북한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러한 체제에서 권력엘리트간의 갈등의 존재 여부, 폭, 정도 등은 그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하는 북한 권력층내에 강·온파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북한의 장래,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와 같이 미국 및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간에 대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4-15> 참조).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권력층내에 강·온파가 존재하며 그들간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강·온파간에 갈등이 다소 있다'고 대답한 전문가가 미국은 69%, 일본은 63%였으며, 특히 일본은 '강·온파간의 갈등이 크다'는 응답의 비율이 13%나 되었다. '강·온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또는 '강·온파가 존재하나 갈등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미국이 23%, 일본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강·온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국 17%, 러시아 18%로 나타났다. '강·온파가 존재하나 갈등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 78%, 러시아 44%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중국의 전문가들이 북한 권력층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러시아의 전문가들중에는 다소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비율이 38%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15> 북한 권력층내의 갈등 정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강·온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15%	-	17%	18%
② 강·온파가 존재하나 갈등은 없다	8%	25%	78%	44%
③ 강·온파간에 갈등이 다소 있다	69%	63%	-	38%
④ 강·온파간의 갈등이 크다	-	13%	-	-
⑤ 모르겠다	8%	-	5%	-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와 북한권력층내 갈등 정도로 살펴본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에 대해서, 주변4국 전문가들은 김정일 체제가 비교적 안정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은 김정일 체제가 식량난, 경제난 등의 위기상황에서도 심각한 내부저항없이 유지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권력층내에 강·온파가 존재하고 그들간의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북한의 대남정책

지난 1988년 10월 남북간 경제교류가 시작된 이래 남북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남한은 북한의 3대교역국이 되었다. 남북간에는 비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교류이기는 하지만 경수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9월에 발생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

주변4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대남 공산화 통일정책의 변화 여부

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의 공산화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서 '공산화 통일정책'이라는 용어가 응답자에게 줄지도 모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대남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의 인식과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의 인식이 대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각각 75%와 56%의 비율로 '북한이 자기식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나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북한은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미국 8%, 일본 22%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17%, 일본이 22%를 차지하였다. 즉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약 80% 내외의 비율로 북한이 여전히 기존의 대남 공산화 통일의 의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간에 현격하게 벌어진 국력의 차이 및 북한의 절대적인 국력 약화에 따라 북한이 공산화 통일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은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9%와 4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 자기식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나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국 33%, 러시아 38%를 차지하였다.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비율은 중국 22%, 러시아 18%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비율을 두고 볼 때,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보다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상당한 정도로 남북한 공존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북한의 대남정책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	17%	22%	39%	44%
② 자기식 통일정책 추진하나 힘이 없다	75%	56%	33%	38%
③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	8%	22%	22%	18%
④ 모르겠다	-	-	6%	-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주변4국의 전문가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은 '귀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표 4-17> 참조).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하였다.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주변4국 모두에서 한 사람도 없었으며, '다소 크다'라는 견해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중국과 일본에서만 각각 17%, 11%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미국 92%, 일본 78%, 중국 67%, 러시아 60%의 비율을 보였다. 전쟁 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은 러시아 40%, 중국 11%, 일본 11%, 미국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 '남한과의 공

존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중국과 일본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다소 크다'라는 응답이 나왔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연계하여 볼 때,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원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남북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점을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에서 오판이나 오식 등에 의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4-17>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매우 크다	-	-	-	-
② 다소 크다	-	11%	17%	-
③ 별로 없다	92%	78%	67%	60%
④ 거의 없다	8%	11%	11%	40%
⑤ 모르겠다	-	-	5%	-

3.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상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정책의 출발점은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다. 남북관계의 기본성격도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변4

국의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남한정책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 국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북한 식량지원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과 정책은 북한이 한국에게 어떠한 대상인가에 대한 주변4국 정부의 인식에 따라 그 평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변4국 전문가들이 남북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이 한국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18> 참조).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각각 32%, 5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각각 44%,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북한을 한국에게 주로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4-18> 북한은 한국에게 어떤 대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지원대상	25%	11%	6%	7%
② 협력대상	12%	22%	44%	53%
③ 경쟁대상	12%	11%	11%	-
④ 경계대상	32%	56%	22%	13%
⑤ 적대대상	19%	-	17%	27%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미국(25%), 일본(11%),

러시아(7%), 중국(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러시아(27%), 미국(19%), 중국(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경쟁, 경계 또는 적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류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게 긍정적인 대상(각각 37%, 33%)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대상(각각 63%, 67%)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각각 50%로 나타났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긍정적인 시각(60%)이 부정적인 시각(40%)보다 우세하였다.

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

남북관계는 일방의 의지만 가지고는 진전될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에 정책의 중점을 두면서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관계도 경제교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주변4국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변4국 전문가들이 실제로 북한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 당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간에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대체로 원하지 않는다'(73%) 또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18%)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인 반면에,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원한다'(61%) 또는 '적극 원한다'(6%)로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34%에 달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관계개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대체로 원하지 않는다' 37%, '절대 원하지 않는다' 26%)로 상당히 높았다. 한편,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견해와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각각 40%, 4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참조).

<표 4-19>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적극 원한다	-	-	6%	20%
② 대체로 원한다	-	-	61%	20%
③ 그저 그렇다	9%	37%	-	13%
④ 대체로 원하지 않는다	73%	37%	28%	34%
⑤ 절대 원하지 않는다	18%	26%	6%	13%

다. 향후 2~3년의 남북관계 전망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가 본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은 예컨대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술적 필요성, 미국, 중국 등의 대북정책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앞으로 2~3년내 남북한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

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4-19>의 분석을 유추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응답의 결과는 <표 4-2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우 '획기적 진전' 17%, '다소 진전' 44%로 응답자의 61%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어서 러시아(53%), 미국(50%), 일본(34%)의 순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은 일본 44%, 러시아 40%, 중국 33%, 미국 33%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비율이 22%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비교·분석해보면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중국 및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입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에 상응하게 향후의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 향후 2~3년의 남북관계가 다소 진전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정책당국자들의 의지 또는 입장과 같은 주관적 요인이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결정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중시하는 반면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그러한 주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 현실, 주변환경의 변화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과 정책상대방(한국)의 역할과 정책능력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향방은 1차적으로 북한당국의 정책의지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으나, 북한의 경제적 위기의 정도, 대외관계 등 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한국정부의 정책수행능력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표 4-20>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	12%	17%	-
② 다소 진전될 것이다	50%	22%	44%	53%
③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33%	44%	33%	40%
④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	22%	6%	7%
⑤ 모르겠다	17%	-	-	-

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사업 분야와 방법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남북관계가 발전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한국은 주로 교류·협력문제를, 북한은 정치·군사문제를 중시해 왔다. 사실 남북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지난 2~3년 동안에도 비록 간접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한국은 북한의 3대 교역국가

로서 남북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주변4국의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분야의 사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 결과, '경제교류 및 협력'분야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일·중·러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여타 국가에서의 응답비율 35~37%의 두 배에 가까운 6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중시된 분야는 '군사적 대결 해소'와 '정치적 신뢰구축'이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군사적 대결 해소'가 더 중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서는 '정치적 신뢰구축'이 다소 비중이 높았다(<표 4-21> 참조). '체육·문화분야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 분야는 우선 추진사업분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북한의 군비축소, 북한에 대한 개혁촉구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표 4-21>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사업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정치적 신뢰구축	10%	25%	29%	13%
② 군사적 대결 해소	25%	37%	18%	13%
③ 경제교류 및 협력	35%	37%	35%	60%
④ 체육·문화분야의 교류	15%	-	-	7%
⑤ 이산가족 상봉	5%	-	18%	-
⑥ 기타(북한 군비축소/개혁촉구)	10%	-	-	7%

결국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권유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사업 분야는 경제교류 및 협력, 군사적 대결 해소, 정치적 신뢰구축 등으로서 이러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수단의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교류 및 협력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동안 북한은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민간기업을 접촉창구로 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민간기업의 북한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조절하면서 당국차원의 경제교류 및 협력은 남북대화라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풀어 나가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의 견해들이 있다. 다만, 북한이 남북당국간의 거래를 회피하는 전략을 고수하는 상황 아래서 민간차원의 대북경제교류 및 협력만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법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나라에 상관없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표 4-22> 참조). 응답비율로는 러시아가 93%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83%), 미국(73%), 중국(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 22%, 미국 18%, 러시아 7%의 비중을 보였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응답자는 일본(17%)과 중국(11%)에서 소수가 있었으나,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다. '경제협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한반도문제 전문가는 미국(9%)을 제외하고는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는 없었다.

결국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정부 주도에 의한 추진방법이나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 모두 아직까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현실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나 '민간 자율'보다는 민간과 정부가 상호협력하에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4-22> 남북 경제협력 추진방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민간 자율 추진	18%	-	22%	7%
② 민간과 정부 공동추진	73%	83%	67%	93%
③ 정부 주도 추진	-	17%	11%	-
④ 추진해서는 안된다	9%	-	-	-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사업 분야중에서 체육·문화분야의 교류를 상당히 낮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분단지속으로 인한 남북간 이질화의 심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 또한 경시할 수 없는 분야이다. 남북경제협력 추진방법에 관한 질문과 함께 '귀하는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한간 인적 교류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보았다(<표 4-23> 참조).

이에 대한 응답에서도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응답비율로는 경제협력 추진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93%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78%), 미국(55%), 중국(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 44%, 미국 27%, 러시아 7%의 비중

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다. 반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응답자는 일본(22%), 미국(22%),중국(12%)에서 소수가 있었으나, 러시아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인적 교류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한반도문제 전문가는 4개국 모두 한사람도 없었다.

추진방법을 두고 비교해 볼 때, 경제협력에서 보다는 인적 교류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점은 인적 교류분야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활동영역의 확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4-23> 남북 인적 교류 추진방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민간 자율 추진	27%	-	44%	7%
② 민간과 정부 공동추진	55%	78%	44%	93%
③ 정부 주도 추진	18%	22%	12%	-
④ 추진해서는 안된다	-	-	-	-

경제교류 및 협력문제와 관련, 북한의 식량사정이 국제사회에 부각된 이후 한국정부는 대북 식량지원문제에서 다소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1995년 여름 15만톤의 쌀을 제공하고도 남북대화의 재개나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한국정부는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을 조정하면서 대규모의 식량지원은 북한당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대

북 경제지원에도 해당된다.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문제를 협의하자는 제의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라도 북한의 경제사정을 완화하고 남북경협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 결과,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적극 찬성한다' 또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타 국가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보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국보다는 약하지만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100% 찬성의 의사를 보였다(<표 4-24> 참조).

<표 4-24>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적극 찬성한다	18%	-	100%	53%
② 대체로 찬성	64%	56%	-	47%
③ 그저 그렇다	9%	33%	-	-
④ 대체로 반대	9%	11%	-	-
⑤ 절대 반대한다	-	-	-	-

일본의 경우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로서 4개국중 찬성의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그저 그렇다' 33%, '대체로 반대한다' 11%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가장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입장을 보여준 데에는 1970년대 일본여성의 납치사건 노출 등 최근의 일·북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절대로 반대하는 견해는 4개국가에서 모두 없었다.

4. 통일정책에 관한 인식

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면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분단 이후 통일은 하나의 민족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동안 남북한은 통일의 내용, 접근 시각과 방법상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국가목표의 하나로 삼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에 관한 남북한 쌍방의 논의는 자기의 방안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데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증대하고 있다. 냉전체제의 종식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주변4국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에게 한반도 통일은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주변4국이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타파가 자국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분단상태의 지속이라는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실질적

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결과는 주변4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4국 모두에서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미국 82%, 중국 72%, 일본 50%, 러시아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았으나, 4국 가운데에서 중국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9%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는 통일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각각 37%, 38%로서 응답자의 1/3 이상이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5> 참조).

<표 4-25>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반드시 통일	9%	13%	28%	18%
② 되면 좋지만 반드시는 아님	82%	50%	72%	44%
③ 현재 상태 유지	-	37%	-	38%
④ 모르겠다	9%	-	-	-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통일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자국의 국익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급적 현상유지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을 추진하려는 우리

의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통일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하거나 적어도 이들이 통일 거부세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독일통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함께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소극적 동의 내지는 묵시적 방관이 통일의 외적 조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변4국을 한반도 통일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드는 통일외교가 매우 중요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나. 통일의 방법과 시기

탈냉전시대 주변4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관계를 깨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주변4국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일이 어떠한 식으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조기 통일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에 북한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지금까지와 같은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통일외교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변4국 전문가들에게 '귀하는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우선 통일의 방식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 및 일본,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표 4-2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73%, 63%로 매우 높은 데 반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각각 11%, 19%로 매우 낮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각각 89%, 63%의 비중으로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의 경우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25%로 나타났다.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4개국 공히 한사람도 없었다. '통일이 되기 어렵다'고 예상한 응답자가 중국에서는 없었으며,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 각기 9%, 13%, 12%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의 총체적인 국력의 격차와 각각의 발전능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에 의한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표 4-17 참조>)과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주도의 남북관계 변화 예상, 북한체제의 능력결여 및 변화가능성, 체제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정책목표인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배경에는 북한체제의 장기적인 지속, 그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필요성 등이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표 4-12>, <표 4-13> 참조).

<표 4-26> 통일의 방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73%	63%	11%	19%
②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	-	-	-
③ 남북한 합의, 평화적 통일	-	25%	89%	63%
④ 통일이 되기 어렵다	9%	13%	-	12%
⑤ 모르겠다	18%	-	-	6%

독일통일, 예멘통일 등 다른 분단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 등에 따라 붕괴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한의 조기 통일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다.

응답결과, 전체적으로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56%, 57%로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이 향후 10년 이상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비율을 보인 시기는 향후 '10년 이내'로서, 일본 43%, 중국 39%, 미국 24%, 러시아 24%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30년 이내' 및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가 없었던 데 반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30년 안팎의 소요기간을 예상한 응답자가 각각 28%와 24%를 차지하였다(<표 4-27> 참조).

요약하면,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이 짧게는 10년 내외, 길게는 20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 및 러시아의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이 앞으로도 30년 정도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7> 통일의 시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5년 이내	9%	-	-	-
② 10년 이내	27%	43%	39%	24%
③ 20년 이내	56%	57%	22%	28%
④ 30년 이내	-	-	22%	18%
⑤ 30년 이상	-	-	6%	6%
⑥ 모르겠다	9%	-	11%	24%

통일의 시기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급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단순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분단으로 인한 과다지출과 통일이 가져올 이득을 고려한다면 통일비용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인 것이다. 서독의 경우처럼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주변4국의 전문가들이 통일비용을 고려할 경우 통일의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한국이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미국의 경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없었으나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70%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13%, '동의하는 편이다' 5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러시아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13%, '동의하는 편이다' 47%로서 일본의 응답률과 거의 비슷하였다.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통일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빠른 통일의 달성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가 20~37% 정도로 나타났다(<표 4-28> 참조).

이에 반해,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절대 반대한다' 28%, '대체로 반대한다' 28%, '전적으로 동의한다' 11%, '동의하는 편이다' 28%로서 반대하는 견해(56%)가 찬성하는 견해(39%)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일의 시기에 대한 예상(<표 4-27> 참조)과 연계하여 볼 때, 중국의 전문가들은 타 국가의 전문가들과는 달리 남북한의 통일을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8> 통일비용의 부담과 통일시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	13%	11%	13%
② 동의하는 편이다	70%	50%	28%	47%
③ 대체로 반대한다	10%	37%	28%	13%
④ 절대 반대한다	10%	-	28%	7%
⑤ 모르겠다	10%	-	5%	20%

다 남북한의 통일정책 평가

우리의 통일은 결국 남북한의 통일정책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나

타날 것이다. 남북한은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정통성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전도 전개하였다.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체제경쟁 차원에서는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이 입증되었다. 북한은 냉전구조 해체, 경제난을 포함한 체제유지능력 저하 등의 대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3대혁명역량」이 매우 쇠퇴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의 통일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 한국의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의 구체적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4국 전문가들에게 "귀하는 한국정부가 통일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결과는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9> 참조).

한국정부가 통일정책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주변4국 모두에서 아무도 없었으며,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6%, 13%의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을 뿐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수행을 '대체로 못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 73%, 일본 57%, 러시아 53%, 중국 44%로서 가장 높게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은 중국 50%, 일본 43%, 러시아 21%, 미국 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정부가 지난 몇 년간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조한 한·미공조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나 '대체로 못하는 편이다'라는 응답(73%)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91%로서 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타 3국의 인식도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심각한 평가와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9>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 평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매우 잘하고 있다	-	-	-	-
②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	-	6%	13%
③ 보통이다	9%	43%	50%	21%
④ 대체로 못하는 편이다	73%	57%	44%	53%
⑤ 매우 못하고 있다	18%	-	-	13%
⑥ 모르겠다	-	-	-	-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이 어떠한 식으로 작성되는가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조국통일」이 국정목표의 하나로서 정부는 통일논의의 개방화, 북한에 관한 이해의 확산 등과 함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사수렴을 정책형성과정에서 중시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입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수립되는지에 대한 주변4국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30> 참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견해가 가장 높았다. 미국의 경우는 91%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60%, 러시아 38%, 일본 33%로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통일정책(방안)이 국내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변함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통일방안(대남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견해가 일본 33%, 중국 15%, 러시아 12%, 미국 9%의 비율로 지적되었다.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미국에서는 없었으며, 일본 33%, 중국 15%, 러시아 9%로 나타났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견해를 보인 응답자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없었으나, 러시아에서는 25%로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되었다.

<표 4-30> 통일정책 결정과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국민여론 수렴	-	-	5%	25%
② 통일환경 변화	-	33%	15%	9%
③ 북한방안 대처	9%	33%	15%	21%
④ 국내정치상황	91%	33%	60%	38%
⑤ 모르겠다	-	-	5%	-
⑥ 기타	-	-	-	6%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역할을 담당할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가장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여타 국가도 한국의 통일정책 결정과정과 정책수행에 부정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변4국의 신뢰와 지지 획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주변4국에 대한 통일정책의 정확한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 정부가 통일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결과는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1> 참조).

<표 4-31>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 평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매우 잘하고 있다	-	-	-	-
②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	25%	-	27%
③ 보통이다	9%	25%	39%	27%
④ 대체로 못하는 편이다	27%	50%	50%	20%
⑤ 매우 못하고 있다	55%	-	11%	27%
⑥ 모르겠다	9%	-	-	-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견해는 북한이 통일정책 수행을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로 일본 50%, 중국 50%, 미국27%, 러시아 20%로 나타났다.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미국이 55%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27%와 11%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없었다.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해서도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전문가는 주변4국 모두에서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을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라고 평가한 전문가의 비율이 25%로 나타나 한국에 대한 평가(0%)와는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문가중에서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을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라고 평가한 사람(6%)이 있었는 데 반하여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구체적 표현양식이다.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 목표, 원칙, 접근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각기 여러 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국)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북한)에 이르렀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 결과, <표 4-3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55%의 지지를 받았으나 북한의 「고려연방제」방안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만, '두 방안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한 응답자가 45%나 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50%, 40%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한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두 방안 모두에 불만을 표시한 견해는 중국이 22%, 러시아가 40%였다. 한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통일방안중 어느 한 쪽에 경사된 지지성향을 나타낸 반면에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한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43%로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통일방안에 비해 결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또한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표 4-32>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선호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북한의 '고려연방제' 방안이 좋음	-	43%	50%	40%
② 남한의 '민족공동체' 방안이 좋음	55%	43%	11%	7%
③ 두 방안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45%	14%	22%	40%
④ 모르겠다	-	-	17%	7%
⑤ 기타 (2체제 공존)	-	-	-	7%

라. 대북정책

주변4국 전문가들의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높았음을 보았다(<표 4-7> 참조).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남한과의 관계개선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정책적으로 남한배제전략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남북관계와 미·북 및 미·일관계가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서 진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견해들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한국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

는 질문을 하였다(<표 4-33> 참조).

이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의 입장과 일본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전문가들의 경우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각각 72%와 80%의 높은 비율로 한국이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무조건 협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남북한관계가 개선되면 협조한다'는 조건부 협조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22%와 20%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한관계가 개선되면 협조한다'는 조건부 협조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75%를 차지하였으며, '무조건적인 협조'는 25%에 불과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협조와 조건부 협조가 각각 55%와 4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간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무조건 반대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전문가는 주변4국 모두에서 아무도 없었다.

<표 4-33>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대한 협조 여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무조건 협조	55%	25%	72%	80%
② 남북한관계가 개선되면 협조	45%	75%	22%	20%
③ 무조건 반대	-	-	-	-
④ 모르겠다	-	-	6%	-

한국정부는 위에서 살펴 본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핵문제, 식량지원문제, 4자회담 추진 등 대북정책의 주요 사안과 관련하여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설득·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미·일 공조체제는 문제점도 있었으

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북한의 태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북한을 위압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미관계를 이간하거나 한·미·일 공조체제를 이완시키려는 정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주변4국 전문가들의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모두가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들도 각각 94%와 82%라는 높은 비율로 같은 입장을 보였다(<표 4-34> 참조).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우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매우 압박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다소 압박을 준다'는 견해가 73%로서 타 국가의 전문가들에 비해 한·미·일 공조체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주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미국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4> 한·미·일 공조체제의 대북 압박정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매우 압박을 준다	9%	56%	72%	56%
② 다소 압박을 준다	73%	44%	22%	44%
③ 그저 그렇다	18%	-	-	-
④ 압박 주지 않는다	-	-	6%	-
⑤ 모르겠다	-	-	-	-

마.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우선과제

통일정책은 국내적인 통일의 여건이 튼튼할 경우 자신감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의 경우도 국내적인 기반을 건실하게 조성하면서 동독에 대한 정책을 자신감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주변4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통일기반의 우선적 추진과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다음 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표 4-35> 참조).

<표 4-35>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우선과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정치적 민주화	62%	13%	35%	44%
② 경제성장	38%	63%	18%	39%
③ 지역감정	-	13%	18%	-
④ 빈부격차	-	-	6%	17%
⑤ 노사문제	-	-	-	-
⑥ 세대갈등	-	13%	24%	-
⑦ 모르겠다	-	-	-	-

조사 결과, 주변4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중요시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각각 62%와 35%의 비율로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을 꼽았다. 러시아의 경우도 '정치적 민주화'(44%)와 '경제성장'(39%)의 순으로 우선과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63%)을 '정치적 민주화'(13%)보다 훨씬 중요한 해결과제로서 지적하였다. 이밖에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지역감정'과 '세대갈등'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지적하였다.

바. 통일후 바람직한 체제

동구 및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몰락 이후 이들 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체제로의 복귀를 원하는 나라들은 아직 없다. 정치적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 조차도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명분하에 자본주의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약속해 준다면 그러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체제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4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체제로 어떤 체제를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후 어떤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의 입장과 중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매우 대비되어 나타났다. 즉 미국의 전문가들 모두와 일본의 전문가들의 대부분(88%)이 '자본주의체제'를 바람직한 체제로 지적하였는 데 반하여, 중국의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를 선호하였다. 러시아의 경우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바람직한 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를 지적한 응답자는 주변4국 모두

에서 아무도 없었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혼합체제를 압도적으로 선호한 이유는 현재의 중국체제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북한에 의한 통일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한국의 자본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거부감(<표 4-26> 참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36> 통일 이후 바람직한 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① 자본주의체제	100%	88%	6%	47%
② 자본주의/사회주의 혼합체제	-	12%	94%	47%
③ 사회주의체제	-	-	-	-
④ 모르겠다	-	-	-	6%

V. 요약 및 결론

주변4국이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이해관계 및 향후 한반도정세 변화가 자국의 국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략적 판단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는 향후 한반도 통일문제에 상대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급격한 붕괴없이, 그리고 통일에 따른 유상적·무상적 부담을 가급적 완화하면서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전략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통일과정에서 어떻게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변4국의 한반도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접근방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나아가 향후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유리한 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주변국 통일외교의 정책대안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실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

향후 2~3년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북아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기 보다는 '안정적일 것'으로(최소 53%, 최대 63%) 예상하였다. 다만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 중에서 지난 2~3년전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본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나,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통일외교의 역점 대상국, 한국의 친밀국, 그리고 북한의 친밀 대상국에 대한 조사 결과, 주변국 전문가들은 향후 통일외교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주 대상으로 하여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대미국 접근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통일외교 및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형성과정에 중요한 고려변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모두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이 한반도통일에 상당한 정도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많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변4국에 대한 한국의 통일외교정책의 내용이 차별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변4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자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실질적인 정책이 비교적 조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변국의 공식적 입장과 실제 정책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반면, 자국의 역할

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간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이 두 국가에 대한 우리의 통일 외교 수행이 매우 세심하게 전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북한정세에 대한 인식

지난 몇 년간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등장하여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붕괴와 같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변국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의 2/3 정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변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북한의 개방 정도에 대해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 모두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개방 확대 가능성 및 정도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대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북한의 장래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다소 부정적인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체제하에 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생존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는 반면,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그 경험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생존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북한사회주

의체제의 장래가 어떠한 준거틀로 보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장래문제는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 문제와 관련된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비는 북한의 장래를 보는 시각과 대체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붕괴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그럭저럭 생존해 나가거나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록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쉽게 붕괴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여 발전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미국 및 일본, 중국 및 러시아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는 결국 이들 국가의 대북정책에서의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정부가 북한상황에 대한 주변국의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차별적인 대주변국정책을 강구·추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와 북한권력층내 갈등 정도로 살펴본 김정일체제의 정통성에 대해 주변4국 전문가들은 김정일체제가 비교적 안정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점은 김정일체제가 식량난, 경제난 등의 위기상황에서도 심각한 내부저항없이 유지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권력층내에 강·온파가 존재하고 그들간의 갈등이 확

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4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대남 공산화정책의 변화 여부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의 공산화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미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의 인식과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의 인식이 대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존의 대남 공산화 통일의 의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현재 남북한간에 현격하게 벌어진 국력의 차이 및 북한의 절대적인 국력 약화에 따라 북한이 공산화 통일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이 남한과의 공존을 희망한다는 견해가 가장 높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미·일의 전문가들보다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상당한 정도로 남북한 공존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이 원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남북공존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점을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에서 오판이나 오식 등에 의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3.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정책의 출발점은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다.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특히 대남

한정책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들 국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북한을 한국에게 주로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변4국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간에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인 반면에, 중국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향후 2~3년의 남북관계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일본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비교·분석해보면 두 가지 점이 발견된다. 첫째, 일본, 중국 및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입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에 상응하게 향후의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 향후 2~3년의 남북관계가 다소 진전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한국은 주로 교류·협력문제를, 북한은 정치·군사문제를 중시해 왔다. 사실 남북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는 지난 2~3년 동안에도 비록 간접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한국은 북한의 3대 교역국가로서 남북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경제교류 및 협력분야'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일·중·러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시된 분야는 '군사적 대결 해소'와 '정치적 신뢰구축'이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군사적 대결 해소'가 더 중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서는 '정치적 신뢰구축'이 다소 비중이 높았다.

결국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권유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사업 분야는 경제교류 및 협력, 군사적 대결 해소, 정치적 신뢰구축 등으로서 이러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수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 추진방법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나라에 상관없이 대부분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즉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정부 주도에 의한 추진방법이나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 모두 아직까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현실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나 민간 자율보다는 민간과 정부가 상호협력하에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 인적 교류의 추진방법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점은 인적 교류분야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활동 영역의 확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을 조정하면서 대규모의 식량지원은 북한당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대북 경제지원에도 해당된다.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체로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타 국가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보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국 보다는 약하지만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100% 찬성의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절대로 반대하는 견해는 4개국가에서 모두 없었다.

4.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한반도통일과 관련, 주변4국 모두에서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1/3 이상이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4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통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하거나 적어도 이들이 통일 거부세력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함께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소극적 동의 내지는 묵시적 방관이 통일의 외적 조건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변4국을 한반도통일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만드는 통일외교가 매우 중요함을 말

해 주는 것이다.

주변국의 한반도통일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인식에서 미국 및 일본,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는 데 반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높은 비율로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이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에 의한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주도의 남북관계 변화 예상, 북한체제의 능력결여 및 변화가능성, 체제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정책목표인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배경에는 북한체제의 장기적인 지속, 그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필요성 등이 평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통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이 향후 10년 이상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30년 이내 및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가 없었던 데 반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30년 안팎의 소요기간을 예상한 응답자가 각각 28%와 2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주변4국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이 짧게는 10년 내외, 길게는 20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 및 러시아의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이 앞으로도 30년 정도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비용을 감안한 통일시기와 관련, 한국이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반대하는 견해가 찬성하는 견해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일의 시기에 대한 예상과 연계하여 볼 때, 중국의 전문가들은 타 국가의 전문가들과는 달리 남북한의 통일을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한국의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의 구체적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비판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통일정책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주변4국 모두에서 아무도 없었으며, '대체로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을 뿐 미국과 일본에서는 아무도 없었다. 특히 한국정부가 지난 몇 년간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조한 한·미공조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여타 3국의 인식도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심각한 평가와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해 수립되는지에 대한 주변4국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견해가 가장 높았다. 미국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도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통일정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역할을 담당할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가장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여타 국가도 한국의 통일정책 결정과정과 정책수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변4국의 신뢰와 지지 획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주변4국에 대한 통일정책의 정확한 인식 확산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통일정책 수행에 대해서도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전문가는 주변4국 모두에서 아무도 없었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선호도는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55%의 지지를 받았으나 북한의 「고려연방제」방안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다. 다만, '두 방안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한 응답자가 45%나 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

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50%, 40%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한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두 방안 모두에 불만을 표시한 견해는 중국이 22%, 러시아가 40%였다. 한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통일방안중 어느 한 쪽에 경사된 지지성향을 나타낸 반면에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한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43%로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통일방안이 북한의 통일방안에 비해 결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또한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최근 몇 년동안 남한과의 관계개선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정책적으로 남한배제전략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남북관계와 미·북 및 미·일관계가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서 진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변4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의 입장과 일본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전문가들의 경우는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높은 비율로 한국이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에 무조건 협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한관계가 개선되면 협조한다는 조건부 협조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며, 미국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협조와 조건부 협조가 상대적으로 중간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 핵문제, 식량지원문제, 4자회담 추진 등 대북정책의 주요사안과 관련하여 한·

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설득·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미·일 공조체제는 문제점도 있었으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북한의 태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북한을 위압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미관계를 이간하거나 한·미·일 공조체제를 이완시키려는 정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주변4국 전문가들의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인식에서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모두가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들도 높은 비율로 같은 입장을 피력하였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우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매우 압박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다소 압박을 준다는 견해가 73%로서 타 국가의 전문가들에 비해 한·미·일 공조체제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주 협상 상대방으로서의 미국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주변4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중요시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성장을 꼽았다. 러시아의 경우도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순으로 우선과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정치적 민주화보다 훨씬 중요한 해결과제로서 지적하였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약속해 준다면 그러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체제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체제에 대해, 미국 및 일본의 전문가들의 입장과 중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매우 대비되어 나타났다. 즉 미국의 전문가들 모두와 일본의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자본주의체제를 바람직한 체제로 지적하였는 데 반하여, 중국의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를 선호하였다. 러시아의 경우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도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바람직한 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를 지적한 응답자는 주변4국 모두에서 아무도 없었다.

5.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주변4국의 한반도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의 한반도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정책을 반드시 대변한다거나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 이외에도 한반도통일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 대상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의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통일환경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전개될 한반도 주변환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주변4국은 상호간 교차정상회담을 통하여 동북아 신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적극화하면서도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견제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4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본 조

사결과는 미국과 중국의 정책과 역할이 우리의 통일환경 조성에 매우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북한정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 및 일본의 입장과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북한정세에 대한 우리의 평가 작업이 균형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가 북한정세의 전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획득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이 자국의 정세판단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때,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미국 및 일본, 중국 및 러시아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는 결국 이들 국가의 대북정책에서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에 조응하는 차별적인 대주변국정책을 강구·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도 미국 및 일본의 입장과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전망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의 인식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4국은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간의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법과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역점 추진사업으로서는 경제교류·협력에 이어 군사적 대결의 해소와 정치적 신뢰구축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하면서 4자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방법으로써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나, 민간분야의 자율적 영역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주변4국 모두가 북한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나, 동시에 한국의 통일정책도 상당한 정도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통일정책이 주로 국내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주변4국 모두 대체적으로 한반도통일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냉정한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정부는 그 동안의 통일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변4국에 대해 신뢰를 받는 통일정책을 강구·추진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한·미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한·미공조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의 개발과 외교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본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아직도 매우 미비되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국의 인지도도 낮으며,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는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수행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통일기반 조성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지적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통일정책의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상진. 「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와 한반도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Aspin, Les. *Report of the Bottom-Up Review*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1993).

Carter, Ashton B., William J. Perry and John D. Steinbru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2).

Evans, Gareth. *Cooperation for Peace: The Global Agenda for the 1990s and Beyond* (London: Allen & Unwin, 1993).

Nolan, Janne E. ed.,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94).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P.O., 1994).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P.O., April 1990).

———————,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199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2).

———————————,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P.O., February 1995).

橋本龍太郎.「VISION OF JAPAN」(東京: KKベストセラーズ, 1993. 11).

細川護熙.「日本新黨 責任ある變革」(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3).

小澤一郎.「日本改造計劃」(東京: 講談社, 1993).

2. 논 문

강붕구.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1993.3-1995.5):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중소연구」, 20권 1호, (1996).

박건영.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한 정책."「국가전략」, 제2권 2호 (1996년 가을·겨울).

배정호. "일본신보수세력의 등장과 대외정책 전망." 산업연구원 편,「일본의 정책변화와 장래」(서울: 산업연구원, 1996).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Christoffersen, Gaye. "China and The Asia-Pacific." *Asian Survey*, Vol. 36. No. 11 (November 1996).

Ikenberry, John. "The Myth of Post-Cold War Chaos." *Foreign Affairs* (May/June 1996).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Vol. 73, No. 2 (1997).

Zhao, Gancheng. "China's Krorea Unification Policy." (A Paper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Seoul, Hilton Hotel, May 22-23, 1996).

1994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Draft), 6 May 1994.

張庭延. "中國의 對外政策과 南北韓과의 關係." (자유수호 통일 특별강좌, 서울 타워호텔, 1997. 5. 2).

錢其琛. "始終不愉地奉行獨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 「求是」, 1995年 第12期 (1995. 6).

3. 기 타

「조선일보」.

「중앙일보」.

New York Times.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文匯報」(香港).

<부록 1>

전문가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통일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한편,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 결과는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이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귀하의 평소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통일정책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설문에 대해 응답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V 를 표시해 주십시오.
2.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1996년 11월

민족통일연구원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232-4726~7, Fax: 231-4304)

북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1. 귀하는 북한이 한국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지원대상

_____② 협력대상

_____③ 경쟁대상

_____④ 경계대상

_____⑤ 적대대상

_____⑥ 모르겠다

2. 귀하는 북한의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경제난 등으로 붕괴할 것이다

_____② 그럭저럭 생존해 나갈 것이다

_____③ 경제난을 극복하여 발전해 나갈 것이다

_____④ 모르겠다

3. 귀하는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의 개방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전면적인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_____② 소극적인 개방에 머물 것이다

_____③ 개방이 후퇴할 것이다

_____④ 모르겠다

4. 귀하는 최근 2~3년 동안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많이 변하고 있다

_____② 약간 변하고 있다

_____③ 별로 변하지 않았다

_____④ 거의 변하지 않았다

_____⑤ 모르겠다

5. 귀하는 앞으로 2~3년 내 남북한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_____② 다소 진전될 것이다

_____③ 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_____④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_____⑤ 모르겠다

6. 귀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_____① 매우 크다

_____② 다소 크다

_____③ 별로 없다

_____④ 거의 없다

_____⑤ 모르겠다

7. 귀하는 북한이 붕괴과정에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① 5년내에 붕괴될 것이다

_____② 붕괴단계에 진입해 있다

_____③ 붕괴할 가능성이 없다

_____④ 모르겠다

8. 귀하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북한은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고 있다

_____② 북한이 자기식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나 그럴 만한 힘이 없다

_____③ 북한은 남한과의 공존을 원하지 않는다

_____④ 모르겠다

9.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_____① 적극 지지한다

_____② 다소 지지한다

_____③ 지지도 반대도 아니다

_____④ 다소 반대한다

_____⑤ 적극 반대한다

_____⑥ 모르겠다

10. 귀하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매우 부족하다

_____② 조금 부족하다

_____③ 부족하지 않다

_____④ 충분하다

_____⑤ 모르겠다

11. 귀하는 북한권력층내에 강·온파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① 강·온파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_____② 강·온파가 존재하나 갈등은 없다

_____③ 강·온파간에 갈등이 다소 있다

_____④ 강·온파간의 갈등이 크다

_____⑤ 모르겠다

12. 귀하는 다음의 항목에서 남북한 중 어느쪽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X표를 하세요)

	남 한	북 한	모르겠다
① 자 유			
② 평 등			
③ 자 주			
④ 민 주			
⑤ 도 덕			
⑥ 문화·예술			
⑦ 군 사 력			
⑧ 인 권			
⑨ 경 제			

13. 귀하는 다음 항목에서 남북한간 이질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크다	약간 크다	차이 없다	모르겠다
① 언 어				
② 가족생활				
③ 직장생활				
④ 여가생활				
⑤ 풍 습				

한반도 통일환경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14. 귀하는 최근 2~3년의 동북아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_____① 매우 안정적이다

_____② 다소 안정적이다

_____③ 그저 그렇다

_____④ 다소 불안정하다

_____⑤ 매우 불안정하다

15. 귀하는 향후 2~3년의 동북아 국제정세가 어떠리라고 예상하십니까?

_____① 매우 안정적일 것이다
_____② 다소 안정적일 것이다
_____③ 그저 그럴 것이다
_____④ 다소 불안정할 것이다
_____⑤ 매우 불안정할 것이다

16. 귀하는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__②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__③ 그저 그럴 것이다
_____④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__⑤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 귀하는 한국의 통일외교에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미국
_____② 일본
_____③ 중국
_____④ 러시아
_____⑤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 없음
_____⑥ 모르겠다

18. 귀하는 다음 국가 중 한국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북한
_____② 미국
_____③ 일본
_____④ 중국
_____⑤ 러시아
_____⑥ 모르겠다

19. 귀하는 다음 국가 중 북한이 가장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한국
_____② 미국
_____③ 일본
_____④ 중국
_____⑤ 러시아
_____⑥ 모르겠다

20. 귀하는 주변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현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_____② 북한체제의 변화를 끌어 내려는 정책을 추진한다
_____③ 북한체제의 유지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_____④ 모르겠다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21. 귀하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_____②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_____③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_____④ 모르겠다

22. 귀하는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_____①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_____②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_____③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_____④ 통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_____⑤ 모르겠다

23. 귀하는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한국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무조건 협조하여야 한다

_____② 남북한관계가 개선되면 협조한다

_____③ 무조건 반대하여야 한다

_____④ 모르겠다

24. 귀하는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유리

_____② 불리

_____③ 한반도 통일지연

_____④ 영향 없음

_____⑤ 모르겠다

25. 귀하는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_____① 북한의 「연방제」 방안 (Koryo Confederation / One State - Two System)이 좋다

_____②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Korean National Community / One State - One System)이 좋다

_____③ 두 방안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_____④ 모르겠다

26.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_____① 5년 이내

_____② 10년 이내

_____③ 20년 이내

_____④ 30년 이내

_____⑤ 30년 이상

_____⑥ 모르겠다

27. 귀하는 한·미·일 공조체제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매우 압박을 준다
_____② 다소 압박을 준다
_____③ 그저 그렇다
_____④ 압박을 주지 않는다
_____⑤ 모르겠다

28. 귀하는 한국 정부가 통일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매우 잘하고 있다
_____②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
_____⑤ 매우 못하고 있다
_____⑥ 모르겠다

29. 귀하는 북한 정부가 통일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매우 잘하고 있다
_____②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대체로 못하고 있는 편이다
_____⑤ 매우 못하고 있다
_____⑥ 모르겠다

30. 귀하는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국민이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진다

_____②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다

_____③ 북한의 통일방안(대남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_____④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

_____⑤ 모르겠다

31. 귀하는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분야의 사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정치적 신뢰구축

_____② 군사적 대결 해소

_____③ 경제교류 및 협력

_____④ 체육·문화분야의 교류

_____⑤ 이산가족 상봉

_____⑥ 기타(무엇:)

32. 귀하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한국이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적극 찬성한다

_____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_____③ 그저 그렇다

_____④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_____⑤ 절대 반대한다

33. 귀하는 북한 당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적극 원한다

_____② 대체로 원한다

_____③ 그저 그렇다

_____④ 대체로 원하지 않는다

_____⑤ 절대 원하지 않는다

34. 귀하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_____②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_____③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_____④ 경제협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_____⑤ 모르겠다

35. 귀하는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한간 인적 교류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_____②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_____③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_____④ 인적 교류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_____⑤ 모르겠다

36. 귀하는 한국이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_____② 동의하는 편이다

_____③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_____④ 절대 반대한다

_____⑤ 모르겠다

37. 귀하는 다음 중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정치적 민주화

_____② 경제성장

_____③ 지역감정

_____④ 빈부격차

_____⑤ 노사문제

_____⑥ 세대갈등

_____⑦ 모르겠다

한반도 통일 이후 미래상황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38. 귀하는 통일후 어떤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① 자본주의체제

_____②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

_____③ 사회주의체제

_____④ 모르겠다

<부록 2>

Survey on Korean Unification Problem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RINU) was established by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o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on national unification. RINU conducts both medium and long-range researches to study various problems that are expected to develop in the process of, and/or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we at RINU are conducting a survey on the awareness on the part of experts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on various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Korean unification problem.

This survey is conducted in anonymity and therefore secrecy of the respondents will be ensured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will be used only for study purposes.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kindly provide us with your opinion with the understanding that your contribution to this survey will be instrumental in the early realization of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Note: Please observe the following rules at the time of answering our questions:

1. Please make your check(v) mark to the item of our questionnaire which you think is the closest to your thinking.

2. Unless otherwise specified, please make your check mark only at one place.

* **You may return the answer sheet attached at the end of this questionnaire.**

November 1996,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P.O. Box 8232, Seoul, 100-682, KOREA

Tel: 232-4726~7, Fax: 231-4304
e-mail: psr519@chollian.dacom.co.kr

We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concerning North Korea.

1. What do you think North Korea is to South Korea?

------- (1) A party to give assistance to

------- (2) A party for cooperation

------- (3) A party to compete against/with

------- (4) A party to be watched carefully

------- (5) A hostile party

------- (6) I do not know

2.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future of North Korea?

------ (1) It will collapse due to such problems as economic difficulties.

------- (2) It will manage to live one way or other.

------- (3) It will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and attain development.

------- (4) I do not know.

3. Do you think North Korea will open up under the Kim Jong-il regime?

------- (1) It will open up fully.

------- (2) It will open to a limited extent.

------- (3) It will become more closed than present.

------- (4) I do not know.

4. What is your opinion to a view that North Korea has been changing in the past two or three years?

------- (1) It has been changing substantially.

------- (2) It has been changing to a small extent.

------- (3) It has not changed very much.

------- (4) It has changed little.

------- (5) I do not know.

5. How do you think the South-North relations will develop in the next two or three years?

------- (1) It will improve substantially.

------- (2) It will improve to some extent.

------- (3) There will not be much improvement.

------- (4) It will deteriorate.

------- (5) I do not know.

6. To what extent do you see the possibility of the breakout of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 (1) Very great.

------- (2) Relatively great.

------- (3) Not much.

------- (4) Almost none.

------- (5) I do not know.

7. What is your opinion to a view that North Korea is now in the process of system collapse?

------- (1) It will collapse within 5 years.

------- (2) It enters into a collapsing process.

------- (3) There is no possibility for North Korea to collapse.

------- (4) I do not know.

8. What do you think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 (1) North Korea is seeking peaceful co-existence with South Korea.

------- (2) North Korea continues its effort to unify Korea under a communist rule, but it does not have the strength to do so.

------- (3) North Korea does not want peaceful co-existence with South Korea.

------- (4) I do not know.

9. How do you think the North Korean people are thinking of the Kim Jong-il regime?

------- (1) They are fully supporting the Kim Jong-il regime.

------- (2) They are supporting the Kim Jong-il regime to some measure.

------- (3) They neither support the Kim Jong-il regime nor resist it.

------- (4) They are opposed to it to some extent.

------- (5) They are opposed to it out and out.

------- (6) I do not know.

10. How do you think the food situation is in North Korea?

------- (1) Food is in acutely short supply in North Korea.

------- (2) It is in short supply to some extent.

------- (3) It is not in short supply.

------- (4) There is plenty of food in North Korea.

------- (5) I do not know.

11. What is your opinion to a view that there are conflicts between hard-liners and soft-liners among the North Korean power elite?

------- (1) There must not be hard-liners and/or soft-liners.

------- (2) There are hard-liners and soft-liners, but no conflict between them.

------- (3)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m to some extent.

------- (4)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hem to a great extent.

------- (5) I do not know.

12. In the following table, which side do you think is superior between the South and North? Please make an X against the country you think is superior to the other.

	South Korea	North Korea	I do not know
(1) Freedom			
(2) Equality			
(3) Independence			
(4) Democracy			
(5) Morality			
(6) Culture, arts			
(7) Military strength			
(8) Human rights			
(9) Economy			

13. Among the different items in the table below, which do you think has the widest gap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Very wide	A little wide	No gaps	I do knot know
(1) Language				
(2) Family life				
(3) Working conditions				
(4) Leisure, recreation				
(5) Folk customs				

We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on unification environment.

14. How do you assess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 the past two or three years?

------- (1) Very stable

------- (2) A little stable

------- (3) It is in between.

------- (4) A little unstable

------- (5) Very unstable

15. How do you think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n the next two or three years?

------- (1) Very stable

------- (2) A little stable

------- (3) It is in between.

------- (4) A little unstable

------- (5) Very unstable

16. What impact, if any, do you think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will have on Korea's unification?

------ (1) Very positive impact

------ (2) A little positive impact

------ (3) No impact

------ (4) A little negative impact

------ (5) Very negative impact

17. Which neighboring country of Korea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to South Korea's diplomacy in its efforts toward unification?

------ (1) The United States

------ (2) Japan

------ (3) China

------ (4) Russia

------ (5) There is no major power that wants Korea's unification.

------ (6) I do not know.

18. Among the following countries, which country do you think South Korea will feel closest?

------ (1) North Korea

------ (2) The United States

------ (3) Japan

------ (4) China

------ (5) Russia

------ (6) I do not know.

19. Among the following countries, which country do you think North Korea wants to be most friendly to?

------- (1) South Korea

------- (2) The United States

------- (3) Japan

------- (4) China

------- (5) Russia

------- (6) I do not know.

20. How do you evalute four major powers' policy toward North Korea?

------- (1) They conduct a policy which helps the current system in North Korea remain intact.

------- (2) They conduct a policy which induces the current system in North Korea to change.

------- (3) They cannot influence North Korea at all.

------- (4) I do not know.

We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concerning the unification policies of the two Koreas.

21. What do you think of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 (1)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at all cost.

------- (2) Unification is good, but I do not think that it is absolutely necessary.

------- (3) The two sides had better maintain the status quo.

------- (4) I do not know.

22. How in your opinion will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be achieved?

------- (1) Absorption by South Korea

------- (2) Absorption by North Korea

------- (3) Peaceful unification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 (4) It is not possible to achieve unification.

------- (5) I do not know.

23. What do you thin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do concerning the effort of North Korea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1) South Korea should cooperate without any condition.

------- (2) South Korea should help North Korea only if and when the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

------- (3) South Korea should be opposed to it at all cost.

------- (4) I do not know.

24. What impact does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on the Korea's unification?

------- (1) Favorable impact

------- (2) Unfavorable impact

------- (3) Retardation of unification

------- (4) No impact

------- (5) I do not know.

25. How do you think the unification formulas of South and North Korea?

------- (1) North Korea's "Koryo Confederation" (one state - two system) is better.

------- (2) South Korea's "Korean National Community" (one state - one system) is better.

------- (3) Neither formula is satisfactory.

------- (4) I do not know.

26. When do you think that the two Koreas will be unified?

------- (1) In five years.

------- (2) In 10 years.

------- (3) In 20 years.

------- (4) In 30 years.

------- (5) In 40 years.

------- (6) I do not know.

27. What do you think of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ir policy toward North Korea?

------- (1) It gives much pressure to North Korea.

------- (2) It gives a little pressure to North Korea.

------- (3) It gives no pressure.

------- (4) I do not know.

28. How well do you think South Korea is implementing its unification policy?

------- (1) Very well

------- (2) Generally well

------- (3) It is in between.

------- (4) It is being implemented poorly.

------- (5) Very badly

------- (6) I do not know.

29. How well do you think North Korea is implementing its unification policy?

------- (1) Very well

------- (2) Generally well

------- (3) It is in between.

------- (4) It is being implemented poorly.

------- (5) Very badly

------- (6) I do not know.

30. How do you think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is formulated?

------- (1) It is made after fully consulting the opinion of the people.

------- (2) I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of unification.

------- (3) It is made in order to cope with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 (4) I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of South Korea.

------- (5) I do not know.

31. What type of work should be given the top priority in order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 (1) Building up of political trust

------- (2) Reduction of military confrontation

------- (3)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 (4) Exchanges in the field of sports and culture

------- (5) Arrangement for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 (6) Other (Please specify:).

32. What do you think of South Korea's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when North Korea makes an official request?

------- (1) I fully support it.

------- (2) I generally support it.

------- (3) I am neither in favor of it or against it.

------- (4) I am generally against it.

------- (5) I am strongly opposed to it

33. What do you think of the view that North Korea wants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 (1) Very likely

------- (2) Likely

------- (3) It is in between.

------- (4) Unlikely

------- (5) Very unlikely

34. How do you think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 (1) It should be left to the private sector.

------- (2) It should be joint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 (3) It should be promoted by the government.

------- (4) Economic cooperation should not be promoted.

------- (5) I do not know.

35. How do you think the exchanges of people (such as scholars, artists and religious persons) should be conducted between the South and North?

------- (1) It should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rivate citizens.

------- (2) It should be joint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citizens.

------- (3) It should b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 (4) People's exchanges should not be promoted.

------- (5) I do not know.

36. What do you think of the view that even if South Korea should bear the unification cost the sooner the unification, the better?

------- (1) I fully support it.

------- (2) I generally support it.

------- (3) I am generally opposed to it.

------- (4) I am strongly opposed to it.

------- (5) I do not know.

37. In order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unification, what do you think is the top-priority among policy agenda the South Korean society should carry out?

------- (1) Political democratization

------- (2) Economic growth

------- (3) resolution of provincial rivalry and conflict

------- (4) Reduction of gaps between the rich and poor

------- (5) Improve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 (6) Reduction of conflict between the young and established generations

------- (7) I do not know.

We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concerning the post-unification situation of Korea.

38. What type of political system do you think is best suited to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1) Capitalist system

------ (2) A combination between capitalist and socialist systems

------ (3) Socialist system

------ (4) I do not know.

<부록 3>

韓半島統一問題專家問卷調查

一. 對北朝鮮的看法

1. 您認爲韓國對北朝鮮是何種對象?
   1) 協助對象 2) 合作對象 3) 競爭對象 4) 警戒對象 5) 敵對對象
   6) 不知道

2. 您認爲北朝鮮的將來是如何?
   1) 因爲經濟難,將崩壞 2) 持續生存, 但內部問題無法克服
   3) 克服經濟問題,發展下去 4) 不知道

3. 您認爲金正日政權之下的北朝鮮採取什麽政策?
   1) 採取全面開放政策 2) 採取消極開放政策 3) 採取更强硬的政策
   4) 不知道

4. 最近2-3年期間北朝鮮的政策有沒有變化?
   1) 變的多 2) 變了一些 3) 變的不多 4) 幾乎沒變 5) 不知道

5. 您對將來2-3年內南北朝鮮關係如何展望?
   1) 會變甚大 2) 會變一些 3) 會變不多 4) 更惡化 5) 不知道

6. 朝鮮半島發生戰爭的可能性如何?
   1) 非常大 2) 相當大 3) 幾乎不可能 4) 不知道

7. 北韓崩壞的可能性?
   1) 5年內崩壞 2) 進入崩壞階段 3) 不會崩壞 4) 不知道

8. 您認爲北韓想對南韓採取什麽政策?
   1) 希望同南韓共存 2) 希望追求北韓式的統一,但無能爲力
   3) 不願同南韓共存 4) 不知道

9. 您認爲北韓老百姓對金正日的評價如何?
   1) 積極支持 2) 多少支持 3) 有時支持,有時反對
   4) 多少反對 5) 積極反對 6) 不知道

10. 您認爲北韓的糧食供給情況如何?
   1) 非常不夠 2) 不夠 3) 充分 4) 不知道

11. 您認爲北韓領導階層內部有强穩派之間的對立嗎?
   1) 沒有派系之分 2) 有强穩派系,但沒有對立 3) 强穩派之間對立非常嚴重 4) 不知道

12. 您認爲南北韓在下面的事項當中哪一方比較優越?

	韓國	北韓	不知道
自由			
平等			
自主			
民主			
道德			
文化·藝術			
軍事力			
人權			
經濟力			

13. 您認爲南北韓社會的異質化程度如何?

	非常大	相當大	幾乎沒有差異	不知道
語　　言				
家庭生活				
職業生活				
野外活動				
風俗習慣				

二. 對韓半島統一的看法

14. 您對最近2-3年東北亞國際環境的評價如何?
1) 非常的穩定 2) 相當穩定 3) 相當不穩定 4) 非常不穩定

15. 您認爲將來2-3年東北亞國際環境會什麽方向發展?
1) 非常穩定 2) 相當穩定 3) 相當不穩定 4) 非常不穩定

16. 您認爲將來東北亞國際環境對朝鮮半島統一會造成什麽影響?
1) 非常積極的影響 2) 相當積極的影響 3) 相當消極的影響
4) 非常否面的影響

17. 您認爲哪一國會對朝鮮半島的統一造成最大的影響?
1) 美國 2) 日本 3) 中國 4) 俄羅斯 5) 前4國都不願朝鮮半島統一 6) 不知道

18. 您認爲娜一國是韓國的最親近的國家?
1) 北朝鮮 2) 美國 3) 日本 4) 中國 5) 俄羅斯 6) 不知道

19. 您認爲哪一國是北朝鮮希望維持最親近關係的國家?
1) 南朝鮮 2) 美國 3) 中國 4) 日本 5) 俄羅斯 6) 不知道

20. 您認爲美, 日, 中, 俄對北朝鮮採取什麽政策?
1) 維持北朝鮮體制的政策 2) 使得北朝鮮調整體制
3) 4强對北朝鮮體制無法造成影響 4) 不知道

三. 對南北朝鮮的統一政策的看法

21. 您對朝鮮半島實現國家統一的看法如何?
1) 一定要統一 2) 希望達成統一,但現階段不可能 3) 維持現狀是最好 4) 不知道

22. 您認爲朝鮮半島透過什麽方式達成統一?
1) 南朝鮮吸收北朝鮮 2) 北朝鮮吸收南朝鮮 3) 南北朝鮮透過協商, 達成統一 4) 不能達成統一 5) 不知道

23. 您認爲對北朝鮮正追求的同美·日關係改善政策, 韓國政府要採取何種政策爲好?
1) 無條件的合作 2) 南北朝鮮雙方關係回復的前提下合作
3) 一定要反對 4) 不知道

24. 您認爲北朝鮮同美·日關係改善,將對朝鮮半島統一造成何種影響?
1) 積極的影響 2) 否定的影響 3) 延遲統一的進程
4) 不會發生影響 5) 不知道

25. 您對南北朝鮮統一政策構想如何評價?
1) 北朝鮮的「高麗聯邦制」是比較現實性的構想 (一國兩制)
2) 南朝鮮的「民族共同體統一方案」是較現實性的構想 (一國一制)
3) 兩個構想都是不符現實 4) 不知道

26. 您認爲朝鮮半島到何時達成統一?
1) 5年內 2) 10年內 3) 20年內 4) 30年內 5) 30年以後
6) 不知道

27. 您認爲韓·美·日間安全合作關係對北朝鮮造成壓力碼?
1) 非常大 2) 相當大 3) 幾乎沒有 4) 不知道

28. 您認爲韓國政府追求的統一政策有現實性碼?
1) 非常好 2) 相當好 3) 普通 4) 相當不對 5) 非常不對
6) 不知道

29. 您認爲北朝鮮政府追求的統一政策有現實性碼?
1) 非常好 2) 相當好 3) 普通 4) 相當不對 5) 非常不對
6) 不知道

30. 您認爲韓國的統一政策構想通過什麽過程制定呢?
1) 透過南朝鮮老百姓的支持
2) 隨着國際環境變化,南朝鮮統一政策就有變化
3)隨着北朝鮮對南朝鮮政策變化,南朝鮮對北朝鮮的政策就有變化
4) 南朝鮮內部政治情況,對南朝鮮的對北朝鮮政策制定當中,造成非常大的影響
5) 不知道

31. 您認爲爲了實現南北朝鮮關係改善,何種事業是最要緊?
1) 回復政治信任關係 2) 解除軍事對立 3) 進行經濟交流·合作
4) 進行體育·文化交流 5) 親戚交換訪問 6) 其他 (什麽:)

32. 如果北朝鮮向韓國正式要求經濟援助, 韓國政府對北朝鮮要提供援助對此,您的看法如何?
1) 積極贊成 2) 大體上贊成 3) 反對 4) 積極反對

33. 您認爲北朝鮮希望改善同南朝鮮的關係碼?
1) 積極希望 2) 希望 3) 不太希望 4) 絶對不願

34. 您認爲南北朝鮮間經濟合作要如何進行?
1) 民間自由方式 2) 民間和政府一同進行 3) 政府主導下進行
4) 不要進行經濟合作 5) 不知道

35. 您認爲如何進行南北朝鮮間人員交流是最好?
1) 民間自由方式 2) 民間和政府一同進行 3) 政府主導下進行
4) 不要進行人員交往 5) 不知道

36. "如果短期內達成統一,對韓國政府可能帶來非常大的負擔.雖然如此,越早統一,越好." 對這種意見,您的看法如何?
1) 完全同意 2) 大體上同意 3) 大體上反對 4) 完全反對
5) 不知道

37. 您覺得韓國政府爲了打好統一基礎,要解決的最緊要的問題是什碼?
1) 政治民主化 2) 經濟發展 3) 緩和區域間敵對意識
4) 解消貧富差異 5) 勞工問題 6) 代溝問題

四. 對朝鮮半島統一以後問題的看法

38. 您認爲朝鮮半島統一後維持何種體制是最現實呢?
1) 資本主義體制 2) 資本主義和社會主義的混合體制
3) 社會主義體制 4) 不知道

<부록 4>

각국 전문가 명단

1. 미국

- Doug Bandow (Cato Institute)
- David Brown (Asia Pacific Policy Center)
- Morgan Clippinger (State Department)
- James Delaney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 Chuck Down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Robert Dujarric (Hudson Institute)
- L. Gordon Flak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 Robert Gallucci (Georgetown University)
- Gerrit Gong (CSIS)
- Roy Richard Grinke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Charles Horner (Hudson Institute)
- Stephen W. Linton (Eugene Bell Centennial Foundation)
- Robert Manning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 John Merrill (State Department)
- Larry Niksch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Marcus Nolan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Katy Oh (Oh & Hassig Consulting)
- Daryl Plunk (Heritage Foundation)
- James Przystup (Heritage Foundation)
- Kenneth Quinones (State Department)
- Stanley Roth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Michael Schiffer (Legislative Researcher, Senator Diane Feinstein)
- Rinn Sup Shin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Scott Snyd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William Taylor (CSIS)

2. 일본

- 渡邊 勉 (朝日新聞)
- 武貞秀士 (防衛廳 防衛研究所)
- 浜田陽太郎 (AERA)
- 森木 敏 (野村總合研究所)
- 西岡 力 (月刊 現代コリア)
- 西村金一 (防衛廳統合幕僚會議第二幕僚室)
- 小牧輝夫 (アジア經濟研究所)
- 小此木政夫 (慶應大)
- 室岡鉄夫 (日本貿易振興會)
- 深川由起子 (長銀總合研究所)
- 岸野博之 (世界平和研究所)
- 野原敏弘 (內閣官房 內閣情報調査室)
- 佐々木博行 (公安調査廳調査第二部)
- 佐藤浩建 (內閣官房 內閣情報調査室)
- 清田治史 (朝日新聞)
- 塚本勝一 (平和·安全保障研究所)
- 太田康和 (防衛廳 統合幕僚會議事務局)
- 波佐場清 (朝日新聞)
- 坂井隆 (公安調査廳研修所)
- 海雄大塚 (防衛廳)

3. 중국 (전문가 소속 기관)

- 北京大學
- 中央民族學院
- 中國外交部 傘下 國際問題硏究所
- 中國國家安全部 傘下 現代國際關係硏究所
- 國務院 傘下 國際問題硏究中心
- 遼寧省 社會科學院

4. 러시아

- Rustam M. Aslanov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 Yevgeniy Petrovich Bazhanov (Diplomatic Academ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Natal'ya Yevgen'evna Bazhanova (Department of Korea & Mongolia,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 Gennadiy Viktorovich Gryaznov (Department of Korea & Mongolia,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 Nikolay Mikhaylovich Kobozev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 Pavel Semenovich Leshakov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Moscow State University)
- Mikhayl L. Titarenko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 Yuriy Nikolaevich Mazur (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Moscow State University)
- Viktor Mikhaylovich Mazurov (Department of Korea &

Mongolia,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Valentin Ivanovich Moiseev (Korean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Vladimir Stepanovich Myasnikov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oal'd Vasil'evich Savel'ev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Boris Vladimirovich Sinitsyn (Department of Korea & Mongolia,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van Dmitrievich Skorbatyuk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Svetlana Sarafimovna Suslina (Department of Korea & Mongolia,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Vadim Pavlovich Tkachenko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Anatoriy Vasil'evich Torkunov (Moscow State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rina Yevgen'evna Trigubenko (Center of Asian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Yuriy Vasil'evich Vanin (Department of Korea & Mongolia,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Aleksandr Z. Zhebin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硏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佘仁坤
金永椿
申相振외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硏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 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5,7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硏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4,5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硏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5,000원
統一硏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5,500원
統一硏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4,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9,0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入金證과 함께 FAX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